

經營學碩士 學位論文

韓 · 中 F T A 의 對 應 戰 略 에 關 한 研 究

A Study on Response Strategy of FTA between Korea and China.



2
0
1
2
年
2
月

2012年 2月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貿 易 學 科

李 東 燁

李
東
燁

經營學碩士 學位論文

韓·中 FTA의 對應戰略에 관한 研究

A Study on Response Strategy of FTA between Korea and China.



2012年 2月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貿 易 學 科

李 東 燁

本 論文을 李東燁의 經營學碩士
學位論文으로 認准함.

委員長 俞日善 (印)

委 員 崔宗洙 (印)

委 員 金在棒 (印)

2012年 2月 日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목 차>

Abstract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2
1. 연구의 방법	2
2. 연구의 구성	3

제 2 장 FTA의 배경과 한·중 교역현황

5

제 1 절 FTA의 개념과 유형	5
1. FTA의 개념	5
2. FTA의 유형	6
제 2 절 한·중 교역현황	12
1. 한·중 교역의 발전과정	12
2. 한·중 교역의 현황	15

제 3 장 한·중 FTA의 추진현황	18
제 1 절 양국의 FTA 현황	18
1. 한국의 FTA 현황	18
2. 중국의 FTA 현황	24
3. 주요국의 FTA 현황	28
제 2 절 한·중 FTA의 추진현황	30
1. 한·중 FTA의 추진배경	30
2. 한·중 FTA의 추진의 중요성	32
3. 한·중 FTA의 추진일정 및 내용	35
제 4 장 한·중 FTA의 기대효과 분석	37
제 1 절 한·중 FTA의 취약분야	37
1. 농업	37
2. 서비스업	38
3. 중소기업	41
제 2 절 한·중 FTA의 기대 효과	42
1.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42
2. 한·중 FTA의 기대효과	46

제 5 장 한·중 FTA의 대응전략	52
제 1 절 예상취약산업에 대한 대책	52
1. 농업에 대한 대책	52
2. 서비스업에 대한 대책	53
3. 중소 제조업에 대한 대책	56
제 2 절 주요쟁점에 대한 대응 전략	57
1. 중국 측 전략예상과 대응	57
2. 협상쟁점별 구체적 대응	61
3. 한·중 FTA의 대응 과제	66

제 6 장 결론	71
----------------	----

참고문헌	73
------------	----



< 표, 그림 목차 >

<표2-1> 자유무역협정의 유형분류	7
<표2-2> FTA 발전단계별 특징	9
<표2-3> 한·중 교역관계의 발전과정	15
<표3-1> 한국의 FTA 추진현황	19
<표3-2> 중국의 FTA 추진현황	26
<표3-3> 일본의 FTA 현황	29
<표3-4> EU의 FTA 현황	30
<표3-5> 미국의 FTA 현황	30
<표4-1> FTA의 경제적 효과와 영향	46
<표4-2> 한·중 FTA의 장기적 효과	47
<표4-3> 한·중 관세율 비교	49
<표4-4>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업종별 효과	50
<표5-1> 연도별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례	66
<그림4-1> FTA의 경제적 정태효과	44

A Study on Response Strategy of FTA between Korea and China.

by Lee, Dong-Yeop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Abstract

Recently, Korean export to China has been increasing rapidly. Now, China is the largest international trading market in northeast Asia. It is a major target market for exporters from many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So China is currently the largest market for Korean exporters, and it is the country where Korean company's overseas expansions are most active. At the same time, China poses as a possible direct investor for the Korea's domestic market.

A Free Trade Agreement(FTA) which abolishes trade barriers, such as tariffs. FTA guarantees free movement of goods and economic growth through the creation of trade. So far, the establishment of FTA between Korea and China is under consideration. China is not only a new market with an opportunity, also a competitor with a 'definite threat'.

In this situation, both countries pay close attention to establish FTA.

In this study, we try to analyze Expected Effect, such as benefits and harms, of FTA between Korea and China. Then formulate most comprehensive and effective strategy of FTA between Korea and China.

Key words : FTA between Korea and China, FTA, Strategy of Trade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오늘날 세계경제는 WTO¹⁾로 대표되는 다자주의²⁾에서 국경을 초월하는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1990년대 초반부터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표되는 양자주의³⁾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FTA의 확산 추세는 무역 강국으로 한국과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FTA의 체결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특히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ASEAN과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2010년부터 중·ASEAN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되었다. 또한,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FTA 추진에 있어 일본에 주도권을 빼앗길 가능성을 우려하여 한·중·일 3국의 FTA를 먼저 제안하였으며, 현재 인도, 브라질, 한국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3개국 등 여러 나라와 FTA 추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자원과 기술이 부족했던 한국은 수출의 증대를 통한 대외 지향적 성장전략을 구사하여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지만 금융위기 이후 과거에 비해 성장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 중 하나는

- 1) 세계 무역 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는 회원국들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많은 수의 협정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기구이다. 세계무역기구는 1947년 시작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세계 무역 장벽을 감소시키거나 없애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 2) 무역문제에서의 다자주의는 국가 간 협력 촉진을 위해 범세계적 협의체를 두고 규범·절차를 만들어 이를 준수하도록 하자는 접근방식을 말한다. WTO나 우루과이라운드(UR), 도하개발어젠다(DDA) 등이 그 대표적 예다.
- 3) 다자주의가 지역적 한계를 넘어선 포괄적 개념이라면 이와 대조되는 양자주의 혹은 지역주의는 무역협정을 통해 두 나라 간 또는 특정 지역 협정당사국간에는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 무역장벽을 낮추자는 접근방식이다. 1995년 정식 출범한 WTO체제 출범 이후 다자간 무역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국제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양자주의가 오히려 확산되는 추세다.

주요 교역 국가들의 지역무역협정의 체결로 한국수출상품에 대한 관세와 비관세상의 차별적인 조치를 부과하며 수출 환경을 악화시켰기 때문이다.⁴⁾ 그동안 지역주의의 흐름에 뒤처져 있던 한국 정부는 최근 FTA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한국 정부의 통상정책기조에 따라 한국의 FTA 추진은 급물살을 타고 미국과 EU 그리고 인도와의 FTA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캐나다, 중국, 호주, 멕시코 등의 나라들과 FTA 협상 및 사전협의를 갖고 있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이자 제1위의 수출 및 해외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여 중국과의 경제통합협력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 한 것은 이미 오래된 사실이다. 중국과의 FTA 추진은 고속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1992년 공식수교 이후 한국과 중국은 경제 및 비경제분야 모두에서 관계를 심화시켜 왔다. 특히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FTA를 전략적 외교통상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FTA 체결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중국 또한 WTO 가입 이후 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FTA의 일반적인 속성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교역관계가 긴밀할수록 경제통합의 이익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 바, 이 점에서 볼 때 한·중 양국간에 FTA가 체결되면 높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중 FTA체결의 전략동기,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쟁점을 고찰하고 향후 한·중 FTA 체결이 가져 올 경제적 효과와 대응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1. 연구의 방법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한·중 FTA

4) 이기성, 「한중 FTA 추진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2010, p.1.

와 관련된 기존 연구결과를 이용하는 문헌연구 방법을 사용한다. 나아가 양국의 교역현황과 양국의 FTA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간 FTA체결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과 대응전략을 연구하고, 중국경제의 급부상과 한중교역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인식하에 한·중 간의 무역협상을 진행할 경우에 바람직한 무역협상의 진행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기본이 될 자료의 경우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협회, 산업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등에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서적, 학술지, 기타 간행물에 수록된 자료와 공공기관의 통계자료 및 각종계획서와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2. 연구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총 6장으로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서론부분으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연구의 방법 및 구성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FTA의 배경과 유형, 한·중 교역현황 등 FTA에 대한 일반적인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과 한·중 양국간의 교역의 발전과정과 현황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양국의 FTA 추진현황으로 주요국의 FTA 추진현황 그리고 한·중 FTA의 추진현황, 추진의 중요성과 일정 등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중 FTA로 인한 취약분야와 한·중 FTA의 기대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중 FTA의 대응전략으로 한·중 FTA의 체결로 인한 예상취약 산업에 대한 대책과 주요쟁점에 대한 협상전략과 한·중 FTA의 대응과제 대해 서술하였다.

제6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정리한다.



제 2 장 FTA의 배경과 한·중 교역현황

제 1 절 FTA의 개념과 유형

1. FTA의 개념

FTA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의미하며, 당사국 사이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관한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의 제거를 목적(비회원국에 대해서는 다른 관세율을 적용함)으로 체결되는 협정 또는 조약이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은 관세동맹 등과 더불어 지역무역협정의 일종이며, 경제통합의 형태인 동시에 지역주의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 자유무역협정의 개념은 지역무역협정의 발전단계에 따른 유형분류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수준으로, 주로 당사국 사이에 관세 철폐가 그 핵심이다. 당사국 사이에 관세장벽은 제거되지만, 역외국에 대한 무역정책은 각국이 독자성을 유지함으로써 당사국들의 대외관세는 상이하게 운용된다.⁵⁾

자유무역협정은 당사국 사이의 무역을 저해하는 모든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과거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의 일반적인 내용은 당사국의 상품 무역에 관한 자유화와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의 규범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체결된 많은 자유무역협정은 기존의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 이외에도 서비스와 투자는 물론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 경제활동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규정을 포함한다. 이에 더하여 전자상거래, 노동기준, 환경 등 새로운 분야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도 있으며 역내 투자환경 및 경제체도가 개선되는 가운데 투명성이 보장됨에 따라 역내 생산거점 확보 및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

5) 전호국, 「한·중 FTA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4.

다.6)

자유무역협정의 중심요소는 상품 무역에 있어서 관세와 수량제한을 철폐하고 서비스 무역에 관하여 내국민대우를 하는 것이다. 즉, 원산지규정,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조치, 보조금과 상계조치, 예외와 유보사항, 분쟁의 해결에 관한 규정들이 자유무역협정의 핵심을 이룬다. 이러한 규율대상을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을 좁은 의미의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좁은 의미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더 나아가 투자보장협정, 조세조약, 상호인증협정, 경제협력협정을 포함하거나, 통관절차의 간소화, 정보의 공유, 데이터베이스의 정비, 인적·사회·문화의 교류 등 무역촉진·원활화를 위한 여러 조치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자유무역협정도 있는데, 최근에 이러한 형태의 자유무역협정이 증가하는 추세이다.7)

FTA는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를 동시에 갖고 있다. 무역창출효과에 의해, FTA는 회원국간 시장이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회원국 내의 생산이 고비용 생산자로부터 저비용 생산자에게로 재배치하는 효과를 거둠으로써 세계경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반면, 무역전환효과에 의해 비회원국이 기존의 시장으로부터 퇴출되어 피해를 입게 됨으로써 회원국과 비회원국간 무역 갈등 및 분쟁으로 비화될 소지도 있으며, 회원국 내부의 생산이 저비용 외부 생산자로부터 고비용 내부생산자로 전환됨으로써 세계경제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단점도 있다.8)

2. FTA의 유형

1) 형태별 분류

6) 손찬현, 「한·일 FTA의 경제효과와 정책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7) 김현진 외,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

8) 강이수 외, 「신국제통상론」, 서울: 박영사, 2007

일반적으로 인접국가 사이에 관세 등의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무역을 확대하였던 초기 자유무역협정에서 발전하여, 인접국이 아닌 국가 사이에서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즉, 어느 국가가 경제적 상호보완성에 따라 인접국가가 아닌 다른 지역협력체에 속하는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또는 지역협력체 자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경우도 나타난 것이다. 심지어는 지역협력체 사이의 자유무역협정도 등장하게 되었다. 자유무역협정의 유형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⁹⁾

< 표 2-1 > 자유무역협정의 유형

유형	특징
국가 사이의 자유무역협정	국가들이 협정 체결의 당사자
	국가간 시장의 확대 또는 무역진출의 발판마련
	자유무역협정의 기본형태
	NAFTA가 대표적
국가와 지역협력체 사이의 자유무역협정	국가와 지역협력체가 협정 체결의 당사자
	해당 지역협력체에 당사국이 편입되거나 상대방의 시장에 진출
	칠레와 MERCOSUR의 자유무역협정과 멕시코와 EU의 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
지역협력체 사이의 자유무역협정	지역협력체들이 협정 체결의 당사자
	지역협력체 사이의 통합
	MERCOSUR와 EU의 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

자료: 김봉철,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인텔에듀케이션, 2004

첫째, 국가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은 양국 또는 복수국 사이에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관세 등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당사국의 이익을 도모한다. 이러한 경우가 자유무역협정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당사국이 인접하거나 동일한 지역협력체에 속하는 경우에는 무역장벽의 제거로 시장을 확

9) 고준성, 「자유무역협정의 법적고찰」, 법무부, 2003

대하려는 목적이 가장 크지만, 상대국이 인접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협력체에 속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주요한 목적이 상대국이 속한 지역협력체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 중에서 한국과 칠레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이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의 예이며, 복수국간 자유무역협정의 형태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인 NAFTA가 대표적이다.

둘째, 국가와 지역협력체 사이에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가능하다. 만일 어느 지역협력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그 지역협력체에 인접한 경우, 자유무역협정은 해당 국가가 협정을 체결하는 상대방 지역협력체에 편입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칠레와 MERCOSUR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이 국가와 지역협력체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멕시코와 EU의 자유무역협정과 같이 인접하지 않은 국가와 지역협력체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경우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또는 협정을 체결한 지역협력체)가 상대방 지역협력체(또는 상대방 국가)에 경제적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국가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이나 국가와 지역협력체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지역협력체 사이의 자유무역협정도 체결될 수 있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기존의 지역협력체가 보다 큰 규모로 성장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지역주의가 발전하여 다자주의로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NAFTA와 MERCOSUR사이의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MERCOSUR와 EU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다.

2) 발전단계별 분류

지역경제통합은 구성 주체들 사이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을 토대로 내부의 결속도와 진행과정에 따라 몇 가지의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각각의 단계는 그 다음 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그 자체로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자유무역협정(FTA)형태이다. 자유무역협정의 발전단계별 분류는 일반적으로 Balassa의 분류기준 즉, 회원국들 간의 경제적 결합 정도에 따라 자유무

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전경제통합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¹⁰⁾

<표 2-2> FTA의 발전 단계별 특징

단 계	특 징
제1단계 자유무역협정	- 통합에 참가한 각 회원국에는 상품이동에 대한 일체의 무역제한 조치를 철폐하여 역내에서는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한편, 역외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국이 독자적인 관세정책 및 무역제한조치를 취하는 형태. 예: NAFTA, EFTA 등
제2단계 관세동맹	- 자유무역지대의 단계에서 회원국 상호간에는 상품의 자유이동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역외 비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공통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형태. 예: 베네룩스 관세동맹
제3단계 공동시장	- 회원국 상호간에는 재화뿐만 아니라 노동,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이 보장되며, 역외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국이 공통의 관세를 채택하는 형태. 예: EEC, CACM, CCM, ANCOM 등
제4단계 경제동맹	- 각 회원국간의 경제정책을 조정하여 공동경제정책을 취하는 경제공동체. 예: EC
제5단계 완전경제통합	- 회원국 상호간에 초국가적 기구를 설치하여 그 기구로 하여금 각 가맹국의 모든 사회, 경제정책을 조정, 통합, 관리하는 형태. 예: EU

자료: 신경환·박종수, 「국제통상의 이해」, 두남출판사, 1999,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FTA의 발전단계별 특징을 보면, 제1단계 자유무역협정은 당사국(협정 체결국 또는 역내국)의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에 관하여 관세 등 무역장벽을 제거하면서, 비당사국(협정 비체결국 또는 역외국)에

10) 김세영·신상식, 「FTA확산과 한국의 대응」, 두남출판사, 2003, pp.35~36.

대해서는 각 회원국이 독자적인 무역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지역주의의 기본적인 발전단계이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은 당사국의 경제주권을 제한하는 별도의 의사결정기구나 법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유무역협정에서는 당사국들이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독자적인 관세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무역갈절현상이 발생한다. 즉, 자유무역협정의 역외국들은 대외관세가 가장 낮은 자유무역협정 당사국에 상품을 수출한 이후, 높은 대외관세를 부과하는 동일한 자유무역협정의 다른 당사국으로 이 상품들을 재수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각 당사국들은 관세정책실시에 많은 혼란을 겪게 된다. 이러한 국가별 상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서는 역내에 생산된 것임을 증명하는 원산지규정과 같은 공동의 시장운영규칙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¹¹⁾ 자유무역협정은 1960년 형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을 그 시작으로 볼 수 있으며, 1994년 출범한 NAFTA는 규범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발전된 형태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제2단계 관세동맹은 회원국 사이의 무역장벽을 제거하면서, 비회원국에 대해서 공동대외관세(Common External Tariff : CET)를 부과하는 등 공동의 무역정책과 규범을 채택한다. 즉, 자유무역협정에서는 당사국이 역외국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대외관세를 부과하지만, 관세동맹에서는 비회원국에 대한 관세를 관세동맹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결정하여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모든 회원국이 동일한 공동대외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관세동맹의 회원국들은 경제주권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지만, 무역정책 분야에서는 대부분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 또한 공동대외관세의 결정과 같은 공동무역정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정한 기관이 필요하고, 이러한 점은 회원국들의 경제적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에 관세동맹은 자유무역협정보다 대외적인 협상에서 회원국의 응집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관세동맹의 대표적인 예는 베네룩스 관세동맹이다.

11) 정재호, 「자유무역협정하의 최적 관세 및 관세 유예기간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1

제3단계 공동시장은 관세동맹과 마찬가지로 회원국 사이의 무역을 자유화하고 역외국에 대한 공동무역정책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회원국 사이에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까지 보장하는 형태이다. 공동시장은 관세동맹보다 더욱 많은 부분에서 회원국의 공동의사결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공동시장의 회원국들은 관세동맹보다 많은 분야에서 규범을 공유하고 독자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자율권의 많은 부분을 상실한다. 따라서 공동시장은 회원국이 갖는 정치, 경제 및 사회적인 동질성이 가장 중요한 형성의 기반이 된다. 과거의 유럽공동체(EC)는 공동시장 단계의 지역협력으로 성공을 거두었고, MERCOSUR가 관세동맹에서 공동시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제4단계 경제동맹 또는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는 공동시장에서 더욱 발전하여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상호협력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따라서 회원국 사이에는 재화 및 생산요소의 자유이동과 비회원국에 대한 공동관세 부과 외에도, 금융정책, 재정정책, 사회정책 등 거시경제정책까지 공동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경제동맹에서 각 회원국은 각각 별도의 행정기구를 가지고 있지만, 공동의 경제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한 초국가적인 경제기구를 설치한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상당수의 경제규범을 공유하여 경제에 관한 독립성을 거의 상실하게 된다. 1993년 이후 EURO화 출범전의 유럽연합이 이와 같은 단계의 전형에 해당한다.

제5단계 완전경제통합 또는 단일시장(Single Market)이란 경제동맹에서 더욱 발전하여, 회원국들의 단일한 경제규범을 기반으로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단일경제체제하에서 모든 사회·경제정책을 조정·통합·관리하는 초국가적 기구를 설치하여 완전한 경제적 통합을 이룩하는 지역주의 발전단계이다. 또한 완전경제통합에서는 각국이 공동의 통화를 채택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완전경제통합은 각 회원국들이 경제주권을 포기하고 하나의 단일경제단위가 되는 경제통합의 최종단계이며, 현재 EU는 EURO화로 공동의 통화를 사용하고, 완전경제통합의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초국가적 기구의 설립을 통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의 통합까지도

수반하는 경제통합을 말한다.¹²⁾

제 2 절 한·중 교역현황

1. 한·중 교역의 발전과정

1992년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 불과했던 양국간 교역규모는 2005년에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06년에는 1,180억 달러로 18.5% 증가하였다.¹³⁾ 수교 이후 한·중 간 교역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4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 단계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부터 1997년에 발생한 한국의 외환위기 이전까지 양국간 교역이 간접교역에서 직접교역으로 전환되고, 교역규모도 대폭 늘어난 시기이다. 1992년 8월에는 양국간 수교가 이루어지고, 동년 9월에는 한·중 간 무역협정이 발효되었다. 이러한 국교 정상화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그동안 양국간 교역의 장애요인으로 존재하던 중국의 한국 상품에 대한 차별 관세 문제도 해소되었다. 1992년 5월에는 투자보장협정¹⁴⁾이 체결되면서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다. 또한 1992년 2월 덩소핑의 남순강화¹⁵⁾를 계기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

12) 김세영·신상식, 전계서, p.42.

13) 한국무역협회(KITA), www.kita.net

14) 1992년 투자보장협정은 투자자유화를 포함하지 않은 전통적인 투자보장협정으로서 투자, 투자자, 수익만 정의하고 최소 대우 규정 범위에서 constant 보호만 규정하였으며 의정서에 자유송금의 예외를 규정하였고 분쟁 해결 면에서 투자자는 사실상 보상금 관련 분쟁만 중재재판에 제소가능하고 보상금관련 분쟁과 기타 분쟁을 구분하였고 지적재산권에 대해 협정의정서에 규정하였으며 1997년에 양국은 한·중 투자보장 개정 협정을 체결하여 투명성 및 이행의무 부과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전부도 투자협정을 지켜야 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였다.

15) 남순강화(南巡講話)은 덩샤오핑(鄧小平, 덩소핑)이 1992년 1월 18일부터 2월 22일 까지 우한(武漢),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상하이(上海)등을 시찰하고 중요한 담화를 발표한 것으로,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고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다"는 것으로, '싱쯔싱서'를 위시한 이념 논쟁을 정면 반박한 것이었다. 텐안먼 사건으로

하면서 중국의 경제성장률, 대외무역, 외국인투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양국간 직교역 액이 1991년 44억 달러, 1997년에는 237억 달러로 증가하여 6년간 평균 32.2%의 증가율을 유지하였으며, 홍콩을 경유한 간접교역을 포함할 경우 68억 달러에서 288억 달러로 연평균 27.3%씩 증가하였다.¹⁶⁾

둘째 단계는 한국의 외환위기 발생 이후부터 중국의 WTO 가입이 이루어진 2001년까지의 기간으로, 이 기간 중 한국은 1997년 말 심각한 금융위기와 경제 위기를 겪게 되고, 중국도 경기불황을 겪으면서 양국간 교역이 소강상태를 거치게 된다. 세계적인 경기호황과 한국의 벤처 붐 등으로 2001년에는 대중국 수출을 포함한 총수출이 급증하였지만, 미국의 경기침체 등에 따라 IT부문이 급격히 위축되어 세계적인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한국의 대외무역이 크게 위축되었다. 이 기간 중 양국간 직교역이 1997년 237억 달러에서 2001년 315억 달러로 연평균 증가율이 7.4%로 크게 둔화되었으며, 홍콩을 통한 간접교역 역시 29억 달러에서 38억 달러로 증가하여 연평균 6.8% 증가한 데 그쳤다. 그러나 이 기간 중에도 한국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의 상대적 중요성은 계속 상승하였다. 2001년의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총수출의 12%, 대중국 수입은 총수입의 9.4%를 차지하여 1997년에 비해 각각 2%이상 상승하였다.

셋째 단계는 중국의 WTO 가입이 이루어진 이후부터 2005년까지로 중국에 대한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교역규모가 1,000억 달러를 넘어서고, 교역 상품구조에서도 하이테크산업을 중심으로 고도화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중국이 2001년 말 WTO에 가입하면서 대외개방이 더욱 진전되고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불황에서 벗어나면서 중국의 대외무역도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양국간 직교역 액은 2001년 315달러에서 2005년 1,006억 달러로 연평균 33.7%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였다. 그 결과 중국은 2005년 한국 총수출의 21.8%를

일시 중단됐던 개혁개방정책은 다시 추진됐고, 사영기업 육성, 400여 가지의 규제 완화 등 경제개방에 속도가 붙었다.

16) 2008년 한국무역협회 통계 인용

차지하는 최대 수출대상국이자, 총수입의 15%를 차지하는 제2위 수입대상국이 되었다.¹⁷⁾

넷째 단계는 2006년부터 한·중 양국교역이 안정단계에 진입한 단계이다. 즉 2002년~2005년 연평균 33%에 달했던 양국간 교역증가율이 2005년에는 26.7%로, 2006년에는 17.4%, 2008년에는 16.6%로 둔화되었지만, 양국 교역액은 2005년 1,000억 달러에서 2008년의 1,693억 달러로 성장하였다. 한국 대 중국 수입은 총수입의 15%에서 17.4%로 상승하여, 미국을 앞서 한국의 수출대상국 1위를 차지하였다.

2009년 세계금융 위기로 인해 한국과 중국경제 역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다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양국간 무역교역액은 2008년보다 16% 줄었다.

2006년 이후 양국간 교역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원인은 양국간 무역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의한 대 중국 수출유발 효과가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완제품뿐 아니라 중간재 산업에서 중국의 생산이 확대되면서 수입대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대중국 수출이 이전과 같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 걸쳐 IT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중국이 WTO 가입 이후 중화학공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면서 그동안 한국의 대중국 수출을 주도해온 부품과 소재분야도 중국 수출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¹⁸⁾ 한국의 대중국 교역 수출규모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산 제품의 수입증가율이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가율을 상회하고, 한국의 대중국 교역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양국간 무역불균형이 축소되는 구조로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7) 박성호, 림금숙, 「한중통상정책비교론」, 대명출판사, 2007.

18) 김진명, 「중국의 FTA정책과 한·중FTA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석사논문, 2009, pp.4~5.

<표 2-3> 한·중 교역관계의 발전과정

(단위:%, 천불)

년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증가액	총 무역액
1992	2,654	164.7	3,725	8.3	-1,071	6,379
1993	5,151	94.1	3,929	5.5	1,222	9,080
1994	6,203	20.4	5,463	39	740	11,666
1995	9,144	47.4	7,401	35.5	1,743	16,545
1996	11,944	24.4	8,539	15.4	2,838	19,916
1997	13,572	19.3	10,117	18.5	3,455	23,689
1998	11,944	-12	6,484	-35.9	5,460	18,428
1999	13,685	14.6	8,867	36.7	4,818	22,552
2000	18,455	34.9	12,799	4.3	5,656	31,254
2001	18,190	-1.4	13,303	3.9	4,887	31,493
2002	23,754	30.6	17,400	0.8	6,354	41,154
2003	35,110	47.8	21,909	25.9	12,201	57,019
2004	49,763	41.7	29,585	35	20,187	79,348
2005	61,914	24.4	38,648	30.6	23,266	100,562
2006	69,459	12.2	48,556	25.6	20,903	118,015
2007	81,985	18	63,028	15.3	18,957	145,013
2008	91,389	11.5	76,930	22.1	14,469	169,319
2009	86,703	-5.1	54,246	-29.5	32,457	140,949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통계자료(2010.2)

2. 한·중 교역의 현황

한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인 미국, 일본과 비교한 중국과의 교역 현황을 보면, 2003년 이후 중국에 대한 수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 이후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액을 합한 금액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중

국에 대한 수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 이후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액을 합한 금액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실물경제 대외거래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른 속도로 높아짐에 따라, 중국의 경제성장은 이미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경제의 고도성장과 한·중 간 경제교류의 급속한 확대에 따라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최대 투자처이며,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라 대중 관계가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성장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함의와 부정적인 함의를 아울러 갖는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무엇보다 13억 인구 대국의 고도성장에 따른 거대 수출시장의 창출 측면을 들 수 있고,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나 환경 문제, 제조업 공동화, 그리고 중국의 추격에 따른 선진국과 중국사이의 너트크래커(nutcracker)¹⁹⁾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하였으며, 2002년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다시 한 번 활발하게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상위 20개 품목 중 한국은 일본과 10개, 한국과 대만은 14개 품목이 중복되고 있으며, 한국의 대중수출액은 각각 45.7%와 60.6%를 차지하고 있는데,²⁰⁾ 투자를 업종별로 보면 82%는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제조업 투자는 143억 달러로, 전체 중국 투자 170억 달러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총 해외 투자 중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 57.1%, 금액 52.8%인 데 비해 중국은 제조업의 집중도가 훨씬 높은 편이다.

제조업 내에서는 전자통신, 자동차, 섬유 의복, 화학, 기계 등이 핵심 투자

19) 한국의 경제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사이에 끼어 호두까기 기계속의 호두와 같은 처지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을 때,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상황을 설명할 때 자주 쓰였다. 당시 한국의 기업들이 독자적인 기술 확보에 실패하고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그나마 우위를 지키던 가격경쟁력마저 중국에 빼앗겨 움푹달작 못하는 처지가 된 상황이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변하지 않으면 너트크래커 속의 호두 신세가 될 것이라는데 동의했으나, 기술은 중국에 앞서고 가격경쟁력은 선진국에 앞서는 정보기술 분야를 예로 들며 이에 반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20) 지만수,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의 몇 가지 논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분야이다. 전자통신장비가 26.8%로 가장 많으며, 수송기계 부분의 투자가 13.1%, 석유화학 섬유 의복 부분의 투자가 각각 10.8%를 차지하고 있다.²¹⁾ 한국의 대중국 투자비율은 1992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독립투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50~100%의 지분으로 투자하는 기업이 감소하고 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액은 5억8,900만 달러로 조세회피지역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중국의 최대 투자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한·중 투자 관계는 아직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중국의 대한국 투자에 비해 일방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은 외국인 직접투자 증대로 인한 자국 산업경쟁력 제고와 중국 내 시장경쟁 치열 등으로 국내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이것은 한·중 양국가간 기술격차를 축소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추세는 향후 반도체, PDP, 휴대폰, 자동차 등 양국가간 기술격차가 큰 분야에 보유기술유출로 인해 한국의 기술경쟁력 약화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21)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한국의 대 중국 품목별 교역 동향」, 2007

제 3 장 한·중 FTA의 추진현황

제 1 절 양국의 FTA 현황

1. 한국의 FTA 현황

2003년부터 시작하여 한국정부는 동시다발적인 FTA 전략을 취하였으며, 최근 들어 거대경제권, 자원부유국과의 FTA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2004년 6월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을 제정하여, FTA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FTA 추진과정 중 최대한 전문가와 산업계의 이익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지금 한국 정부는 주요 교역국들과 동시다발적으로 관세철폐는 물론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의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고 있다.²²⁾ 이미 FTA에 뒤져있던 한국은 FTA를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나라와 FTA를 동시에 추진하여 발효시킴으로써 각 FTA별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 보완하여 한국이 감당하여야 하는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이익의 극대화와 한국 기업들의 수출시장 확대와 함께,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²³⁾ 한국이 2003년부터 현재까지 이미 체결된 FTA는 8개에 달하고 있고 현재 협의 중인 FTA는 7개가 있으며, 10개의 FTA에 대한 타당성이 연구되고 있다.

22) 정인교·노재봉,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KEIP, 2009

23) 박순찬, 「세계경제」, 대외경제연구원, 2004

<표3-1> 한국의 FTA 추진 현황

(2011년 7월 현재)

진행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발효 (6건, 44개국)	칠레	99년12월 협상개시, 03년2월 서명, 04년4월 발효
	싱가포르	01년1월 협상개시, 05년8월 서명, 06년3월 발효
	EFTA(4개국)	05년1월 협상개시, 05년12월 서명, 06년9월 발효
	ASEAN(10개국)	05년2월 협상개시, 06년8월 상품무역협정 서명, 07년6월 발효 07년11월 서비스협정 서명, 09년5월 발효 09년6월 투자협정 서명, 09년9월 발효
	인도	06년3월 협상개시, 09년8월 서명, 10년1월 발효
	EU(27개국)	07년5월 협상출범, 09년7월 협상 실질 타결, 09년10월15일 가서명, 10년10월6일 서명, 11년7월1일 잠정발효
체결(2건, 2개국)	미국	06년6월 협상 개시, 07년6월 협정서명 10년12월 추가협상타결 11년2월10 추가협상 합의문서 서명 11년11월22일 국회비준통과 (미국은 11년10월13일 국회비준통과)
	페루	09년3월 협상개시, 10년8월 협상타결 10년11월 가서명, 11년3월21 서명
협상진행 (7건, 12개국)	캐나다	05년7월 협상개시, 08년3월 제13차 협상개최
	GCC(6개국)	07년11월 사전협의개최, 총3차례 협상개최(07년7월, 09년3월, 7월)
	멕시코	07년12월 기존의 SECA를 FTA로 격상하여 협상재개 08년6월 제2차 협상개최
	호주	07년5월~08년4월 민간공동연구, 정부간 예비협의 2차례 개최(08년10월, 12월)

		4차례 회기 간 회의 개최(10년8월, 10월, 11월, 11년1월)
	뉴질랜드	07년2월~08년3월 민간공동연구 정부간 예비협의 2차례 개최(08년9월, 11월) 총4차례 협상 개최(09년6월, 9월, 12월, 10년5월) 10년7월 정상회담, 10년8월 및 11년2월 통상장관회담
	콜롬비아	09년3월~9월 민간공동연구, 총4차례 협상 개최(09년12월, 10년3월, 6월, 10월)
	터키	08년6월~09년5월 공동연구 2010년1월 국장급 협의 개최, 총 3차례 협상 개최(10년4월, 7월, 11년3월)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10건 17개국)	일본	03년12월 협상개시, 04년11월6차협상후 중단 협상재개를 위한 실무협의 4차례 개최(08년~09년) 동 실무협의를 국장급으로 격상한 협의 진행중 (제1차회의 10년9월동경, 제2차회의 11년5월서울)
	중국	07년3월~10년5월 산관학 공동연구 양국간 민감성 처리방안에 관한 사전협의 진행중 (제1차 회의 10년9월 북경개최) 12년1월 한·중 정상회담 때 논의가 진척됨
	한·중·일	03년~09년 한·중·일 3국간 민간공동연구 09년10월한·중·일 정상회의시 공동연구추진협의 4차례 산관학 공동연구 회의 개최 (10년5월, 9월, 12월, 11년3월) 11년6월27일~28일 제5차 산관학공동연구 회의개최
	MERCOSUR (4개국)	05년5월~06년12월 정부간 공동연구 (07년10월 연구보고서 채택) 09년7월 무역협정(TA)추진 협의를 위한 공동협의 체 설립, MOU체결
	이스라엘	09년8월 공동연구 개시, 10년8월 연구종료
	베트남	3차례 FTA 공동작업반 회의 개최

		(10년6월, 10월, 11년3월)
	몽골	08년10월 민간공동연구 개시 합의
	중미(6개국)	10년10월 공동연구개시 *참여국; 코스타리카, 파나마, 과테말라,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11년5월 공동연구 종료
	말레이시아	11년5월1일 FTA타당성 연구 개시
	인도네시아	11년5월 한-인도네시아 FTA 공동연구 개시 합의

자료: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http://www.fta.go.kr>)

한국의 첫 번째 FTA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2004년 4월 1일에 발효되었다. 한·칠레 FTA는 한국의 첫 FTA로 태평양을 사이에 둔 국가로서 첫 FTA로 기록되고 있다. 또한 지구 반대편의 유망시장인 중남미로 한국 기업의 활동환경을 넓히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였다는 점에도 한·칠레 FTA 타결이 주는 의미가 크다. 이로써 한국도 FTA 체결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이다. 한·칠레 FTA는 공식협상 3년, 준비과정까지 4년이 걸렸다.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은 2006년 3월 2일에 발효되었다. 한·싱가포르 FTA는 칠레에 이어 한국이 체결하는 두 번째 FTA이다. 한·싱가포르 FTA는 동아시아의 주요 인접 교역국과의 본격적인 FTA 추진을 알리는 서막으로 볼 수 있다.

한·EFTA 자유무역협정은 2006년 9월 1일 발효되었다. 한·EFTA FTA가 발효된 이후 소비자에게는 보다 값싸게 양질의 제품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고, 생산자로서는 국내외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기회를 맞게 되는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영향을 받게 되었다.

한·ASEAN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상품협정은 2007년 6월 1일, 서비스협정은 2009년 5월 1일 그리고 투자협정은 2009년 9월 1일에 각각 발효되었다. 아세안

과의 FTA는 한국이 거대경제권과 맺은 첫 FTA로 한국 FTA 정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서 그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또한 아세안이 한국의 4대 수출시장인 점을 감안할 때, 한·ASEAN FTA는 그간 한국이 체결한 칠레, 싱가포르, EFTA와의 FTA에 비해 경제적인 효과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실질적 혜택을 가져올 것이다. 아울러 한국이 동북아·동남아시아를 하나로 연결하는 중심축으로서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의 선도자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앞으로 한국 정부는 한·ASEAN 자유무역지대 완성을 위해 남아있는 서비스·투자협정의 협상도 조기에 마무리함으로써 아세안이 한국의 소중한 친구이자 21세기의 든든한 동반자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2006년 2월 협상 출범을 선언한지 16개월만인 지난 2007년 6월 30일 한·미 양국정부는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 협정문에 서명하였고, 2010년 12월에 추가협상을 하여 2011년 2월 10일에 추가협상합의문에 서명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2011년 10월 13일, 한국은 2011년 11월 22일에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세계 최대의 미국 시장을 무대로 한국기업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되었는데, 한국이 서명한 한·미 FTA는 세계 무역 자유화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며, 한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한국과 미국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심화·발전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2006년 2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CEPA²⁴⁾ 협상 개시가 발표되었는데, 2009년 8월 7일 한·인도 CEPA가 정식 서명되었다. 인도의 고도성장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양국간 교역 및 투자가 CEPA 체결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국간 교역은 2004년 55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156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한국기업의 대인도 투자는 33억 달러를 기록하고

24)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상품,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전반적인 경제교류를 포괄하는 협정으로 넓은 의미의 FTA 성격을 가지며, FTA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주로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을 중심으로 하는 FTA보다 더 광의의 성격을 갖는다.

있다(2009년 3월까지 신고기준). 한·인도 CEPA는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인도와 정치·외교관계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BRICs²⁵⁾ 국가와 최초로 타결되는 FTA로서 인도의 거대시장을 경쟁국에 앞서 선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EU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예비협약의 개최 합의가 2006년 5월 15일에 이루어진 이후 2009년 10월 15일에 가서명하였고, 2010년 10월 6일에 서명하였으며, 2011년 7월 1일에 잠정 발효되었다. 양국이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 경쟁 촉진, 지적재산권 보호, 지속 가능 개발, 교역 장벽 제거 등 협정의 목적을 갖고 있다.

한·페루 자유무역협정의 경우는 2009년 3월 협상을 개시하였고, 2010년 8월 협상이 타결되었다. 그리고 2010년 11월에 가서명하였고, 2011년 3월 21일에 서명하였다. 페루는 자원부국으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중남미 수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뒀다 한다.

한·캐나다의 경우 FTA 추진은 2004년 11월 APEC 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회담에서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되었다. 2005년에 제1차(1월18일~21일) 및 제2차(3월31일~4월1일)에 걸쳐 사전협약이 개최되었는데 양국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자유화 실현을 위한 기본원칙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2005년 5월 한·캐나다 FTA 공청회를 개최하여 경제적 효과 및 분야별 고려사항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2007년 7월에 제1차 협상이 개최된 이후 현재 13차례 협상이 진행되었다.

한·멕시코 FTA의 경우 2004년 5월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공동연구에 착수

25) BRICs는 브라질(Brazil), 러시아(Russia), 인도(India), 중국(China)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이들 4개국은 세계면적의 30%가 되는 영토에, 총인구는 2002년 기준으로 세계인구의 43%이다. 막대한 내수시장에, 노동력 역시 풍부하다. 실제로도 2000년 이후 빠른 속도로 수요와 구매력이 증가하는 브릭스 4국은 외국인 투자와 수출 호조로 높은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골드먼삭스를 비롯한 국제 전문기관들은 이들 국가가 앞으로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기로 합의하고, 2004년 10월 ~ 2005년 8월까지 6차례 공동연구모임을 갖고 공동연구보고서가 채택되었다. 2005년 9월에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경제 보완협정(SECA: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한·MERCOSUR 무역협정(TA: Trade Agreement)의 경우 2004년 11월 한·브라질 및 한·아르헨티나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MERCOSUR간 공동연구를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차 공동연구(2005년 5월 파라과이) 및 제2차 공동연구(2005년 8월 서울)결과를 발표하였으며, 포괄적인 무역 및 투자자유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한·일 FTA의 경우 2003년 10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간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6차례의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일본이 농수산물 분야에서 지나치게 낮은 양허수준을 한국에 제시함으로써 인하여 협상이 교착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일본 측 농수산물 분야 양허 안은 무역액 기준 50~60%, 품목 수 기준은 10%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양국 정상회담이 합의한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체결 입장을 견지하면서 일본이 먼저 수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때까지 현재의 냉각기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²⁶⁾

그리고, 한국이 현재 협상진행·준비 또는 공동연구중인 FTA 대상국은 중국, 한·중·일, 이스라엘, 베트남, 몽골, 중미(6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이 있는데, 한국의 대외무역에 더욱 더 힘을 실어서 지금보다 더욱 활발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2. 중국의 FTA 현황

중국이 처음부터 FTA에 큰 관심을 가져왔던 것은 아니다. 1991년 APEC 가입

26) 시빙,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이후 상당기간 지역 내 협력에 대해 회의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 했으며 한때는 아시아통화기구(AMF) 구상에 대한 반대 입장까지 보였다. 그러나 1999년 미국과의 관계악화로 주변국가와의 협력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 수동적이던 지역경제통합 추진 전력이 능동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 중국은 FTA를 통해 인민폐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국제 정치적 지위와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많은 국가와 협력 관계를 맺음으로써 FTA 추진을 동시다발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²⁷⁾ 특히 2001년 WTO 가입이후 세계경제에 급속이 편입되면서 세계화와 경제협력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FTA 등 지역 협력 추진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변신하였다. 특히 중국은 ASEAN과는 자국의 선자유화 조치에 합의하면서까지 지역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중국의 WTO 가입과 ‘서부대개발’ 로 인한 동아시아 각국의 대중경제협력의 기회확대와 WTO 가입으로 중국의 대외통상활동을 제약해 왔던 제도적 장애요인 해소 등은 중국이 ASEAN을 비롯한 인접국들과의 FTA를 적극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여건으로 작용하고 있다²⁸⁾

비록 중국의 FTA 추진은 늦게 시작되었지만 진행속도는 매우 빠르다. 2010년까지 중국은 ASEAN,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코스타리카, 경제 무역 관계 긴밀화 협정(CEPA)²⁹⁾, Asia-Pacific Trade Agreement 등 8개의 FTA를 체결하였고, 중국은 홍콩, 마카오 간 경제협력강화협정을 통해 완전한 시장 개방을 이루었다. 그리고 한국, 인도 간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 중이다. 특히 2012년 1월 한·중 양국간의 정상회담으로 한·중 FTA는 그 진척의 속도에 탄력이 더해지고 있다.

27) 선자, 「중국의 FTA 추진 배경과 전략 해부」, LG주간경제, 2007

28) 고수영,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p.20.

29)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은 무역 자유화 강조하는 일반적 개념의 FTA에 경제, 기술협력 등 다양한 경제 관계를 포함하고 있음.

<표3-2> 중국의 FTA 추진현황

(2010년 현재)

진행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체결/발효	홍콩	03년6월 CEPA체결 04년1월, 05년1월 CEPA 협정문 보완 및 발효
	마카오	03년10월 CEPA 체결 04년1월, 05년1월 CEPA 협정문 보완 및 발효
	ASEAN	04년 [상품무역협정] 및 [분쟁해결메커니즘에 관한 협정] 체결 05년7월20일 발효 07년1월 [서비스무역협정]체결 및 발효 09년8월 [투자무역협정] 체결 10년 ASEAN FTA 본격적으로 발효
	파키스탄	06년11월24일 FTA 체결 06년7월1일 FTA 발효
	칠레	05년11월 FTA 체결 06년10월 FTA 발효
	뉴질랜드	08년4월 FTA 체결 08년10월1일 FTA 발효
	싱가포르	08년10월23일 FTA 체결 09년1월 FTA 발효
	페루	09년4월28일 FTA 체결 10년3월1일 FTA 발효
	Asia-Pacific Trade Agreement	06년7월1일부터 4,000여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실시
	코스타리카	10년4월8일 FTA 체결

협상중	GCC	04년7월 정부 간 협상 개시 현재까지 4차 회담 진행 됨
	호주	05년5월 정부 간 협상개시 현재까지 14회담 진행
	아이슬란드	08년4월 정부 간 협상개시 현재까지 4차 회담 진행 됨
	노르웨이	07년6월 정부 간 협상 개시 현재까지 7차 회담 진행
	SACU	04년 6월 정부 간 협상 개시
연구단계	인도	05년4월 가능성 연구 시작 현재까지 6차 공동연구 진행됨
	한국	04년6월 공동 연구 시작 현재까지 한·중관·상·학 5차 공동연구 진행됨 12년1월 한·중 정상회담으로 양국간 구체적 논의가 진행됨

자료: 중국 상무부 통계 자료를 재구성함

2004년 ASEAN과의 FTA는 중국이 제안하여 시작한 첫 번째 자유무역 협정이다. 2002년 11월 4일, 중국과 ASEAN은 「중·ASEAN간 전면적인 경제협력기본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 2002년 상품무역부터 관련한 협상을 시작하여 2004년 11월 상품무역 관세인하방식, 민간품목, 분쟁해결 메커니즘 등을 포함하는 「상품무역」과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체결하였고 2005년 7월부터 발효되어 7,000여 가지 상품에 대한 전면적인 관세인하 조치가 이루어졌고, 다음 조치로서 2007년 1월 14일 리자오성 중국 외교부장관과 ASEAN 10개국 경제부장이 중·ASEAN FTA 서비스무역협정에 서명하였다. 중국은 앞으로 WTO 규정 내에서 건축, 환경, 교통, 스포츠, 비즈니스 등 5개 분야 26개 세부 분야에서 ASEAN 회원국에게 개방된다. 한편, ASEAN은 금융, 통신, 교육, 관광, 건축,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중국에 시장을 개방하게 된다. 2009년 8월 「무역투자협정」을 체결하게 되어 중·ASEAN FTA가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2004년 4월 시작된 중·칠레 FTA는 2004년 10월말에 완료하였다. 공동연구에 따라 2004년 11월 18일 정부 간 협상을 개시하여 2005년 11월 양자간 FTA를 체결하였고, 2006년 10월에 발효되었다. 한편, 칠레정부는 협상을 진행함과 동시에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MES: Market Economy Status)를 부여하였다. 중·칠레 FTA는 2006년 발효 후 2007년 중국과 칠레 양국간 무역교역액은 147억 달러에 달한다. 그 중 중국은 칠레로부터의 수입액은 103억 달러로 79%, 수출액은 44억 달러로 42%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중국과 뉴질랜드 FTA는 2004년 5월 공동연구 종료 후 2004년 12월 정부 간에 협상을 개시하였다. 양국간 총 15차 협상을 진행한 결과 2008년 4월 7일 FTA를 체결하였고 2008년 10월에 발효되었다. 그리고 뉴질랜드정부도 정부 간의 협상 개시와 동시에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 지위를 승인하였다. FTA를 체결함에 따라 중국의 대 뉴질랜드 수출은 2007년~2027년까지 연평균 1.8~2.8억 달러가 증가하여 총 247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³⁰⁾

그 밖에도 2007년 4월 10일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의 한국방문에서 무역규모 확대, 상호투자 촉진, 기술 분야 협력강화, 한·중 FTA 공동연구 추진 등 4대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고, 2007년 3월부터 총 5차에 걸쳐 산·관·학이 공동으로 한국과의 FTA의 타당성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 주요국의 FTA 현황

(1) 일본의 FTA 현황

일본은 아시아 지역과의 FTA를 추진함과 동시에 2004년 타결된 멕시코에 이어 칠레와의 FTA 공동연구에 착수하는 등, 중남미 국가들과의 FTA를 적극 추진

30) KOTRA 주베이징무역관 (2008) www.kotra.or.kr

중에 있으며,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가 표방하고 있는 다자주의 취약점을 양자간 FTA로 보완하는 양방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의 FTA 현황을 보면 <표3-3> 과 같다.

<표 3-3> 일본의 FTA 현황

구 분	FTA 대상국
체결완료	ASEAN, 말레이시아, 멕시코,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칠레, 태국, 필리핀
협상중	GCC, 베트남, 스위스, 인도, 한국, 호주
검토중	중국(대만), 캐나다

자료: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http://www.fta.go.kr>)에서 인용하여 재구성함.

(2) EU의 FTA 현황

EU는 지역주의의 발원지이지만, 유럽국가와 비유럽국가와는 차별화된 FTA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즉, 유럽국가와는 FTA 수준을 넘어 유럽의 평화와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경제적 공동체 완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역외국가와는 70년대부터 양자간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EU의 FTA 현황을 보면 <표 3-4>와 같다.

(3) 미국의 FTA 현황

최근 세계 주요국을 중심으로 FTA 추진 움직임이 열렬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기존의 다자주의 우선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역주의와 병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감한 이슈(농업, 노동, 환경, 경쟁 및 남북문제 등)에 대한 다자간 일괄타결을 시도하고 있다. 즉, FTA가 무역자유화의 현실적 대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FTA 현황은 <표3-5>와 같다.

<표3-4> EU의 FTA 현황

구 분	FTA 대상국
체결완료	EEA, Faroe Islands, OCTs, PLO, 남아프리카공화국, 레바논, 마케도니아, 멕시코, 시리아, 안도라 관세동맹, 알제리,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칠레, 크로아티아, 터키, 튀니지, 한국
협상추진중	ACP, GCC, MERCOSUR, 이란
검토중	ASEAN, 싱가포르, 인도, 캐나다

자료: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http://www.fta.go.kr>)에서 인용하여 재구성함.

<표3-5> 미국의 FTA 현황

구 분	FTA 대상국
시행중	이스라엘, NAFTA(캐나다, 멕시코), 요르단
체결완료	칠레, 싱가포르, 한국
협상중	미주(FTAA), 중미(5개국), 호주, 모로코, 아프리카5개국
제 안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우루과이, 중동, 바레인, 이집트, 중동 FTA 추진 첫 행보
연구중	대만, 뉴질랜드, 일본

자료: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http://www.fta.go.kr>)에서 인용하여 재구성함.

제 2 절 한·중 FTA의 추진현황

1. 한·중 FTA의 추진배경

세계무역을 WTO 중심의 범세계 자유화 추진과 다양한 지역주의의 심화라는

상반된 두 조류가 공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에 적응해가면서 선진국이 주축이 된 지역경제권 형성에 대응하고자 기존의 지역주의에 대한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FTA를 무역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었다.³¹⁾ 한·중 FTA에 대해 한국의 업계와 학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한·중 FTA를 선호하는 배경으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수출시장의 확보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한국의 무역흑자 제1위국인 중국 시장의 안정적 확보 및 일본 등의 경쟁국에 대한 선점효과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등이 작용하고 있다.

첫째, 한국은 한·중 FTA에 대해서는 산업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전체적으로는 한·중교역의 확대를 통한 무역수지 흑자, 후생수준의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중국보다도 큰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에 있어서는 중국의 관세 장벽이 사라지면서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부품 수출이 촉진되어 한국 기업의 매출 및 수익이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가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대중 수출 상위 20개 품목 중 한국은 일본과 10개, 한국과 대만은 14개 품목이 중복되고 있으며, 한국 대중수출액의 각각 45.7%, 60.6%를 차지하고 있다.³²⁾ 또한, 최근 대중수출 증가세의 둔화를 극복하는 유효한 계기가 될 것이며, 중국 투자 환경 개선 및 기업진출시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 등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여러 통상 현안들의 해결책이기도 하다.

둘째로는, 동북아 지역경제의 주도권 획득과 지역경제의 통합을 위해서 한국 으로서는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취해야 한다. 최근의 세계경제의 흐름은 NAFTA, EU, ASEAN 등 지역주의확산이 세계적 추세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 는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시장접근성의 제약 등 FTA 미체결 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한국이 제외된 상태에서 중국을 중심으

31) 안병민,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와 추진과제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p.26.

32) 지만수,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의 몇 가지 논점」, KIEP, 2008

로 한 역내 FTA가 가속화될 경우 한국의 수출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중국 통상정책을 통해서 경제대국 중국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³³⁾

셋째로, 중국은 한국에 있어 최대 투자대상국이다. 그동안 안정적인 성장을 해오던 중국진출기업들은 위안화 가치 상승과 중국정부의 각종 외자기업우대조치 철폐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각종규제 정책과 함께 세계개편, 노동법 등이 외자기업에 상당한 부담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각종 투자환경개선은 물론,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혁 등을 한·중 FTA 협상을 통해서 기대 할 수 있다. 앞으로, 상당수의 중국진출 기업들이 향후 거대 중국 시장 개척의 교두보가 될 것이며, 또한 중국진출 기업들이 한·중 FTA에 기대를 걸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FTA는 국내 취약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함으로써 산업간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한·중 FTA 체결은 양국간의 경제성장 및 국민후생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또한 취약산업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농업부문 경쟁력은 상당히 낮으며, 이에 따라 국내농업 보호를 위해 매우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국내 취약산업의 지속적인 보호는 경제전반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소지가 있기에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한 국내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처럼 농업부문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한·중 FTA 체결에 한국은 중국보다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2. 한·중 FTA 추진의 중요성

한·중 FTA 추진에 대한 중요성은 각 나라별로 다를 것이다. 한국은 크게 다름 다섯 가지로 추진의 중요성을 말할 수 있다.

첫째, 동(북)아시아 경제통합의 기초단계이다.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와 대내

33) 김종성, 「중국진출기업을 위한 한·중 FTA 협상 및 향후전략」, 부산대학교 동북아지역혁신대학원, 2008

외적 여건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경제의 성장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경제활동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 지역무역협정을 활성화하고 이를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을 기본전략으로 표방하였다. 즉, 동북아시아의 경제적 역동성을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미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적 인프라 구축과 함께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 및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FTA와 같은 교역질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중 FTA는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 경제협력과 통합을 위한 기초단계의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FTA 추진은 중·일 또는 한·중·일 FTA, 나아가 동아시아 FTA에 대한 초석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³⁴⁾

둘째,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이다.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크면서 동시에 통상마찰에 따른 리스크가 큰 한국의 입장에서, FTA를 통해 중국과 경제적 동맹관계를 맺는 것은 상호간의 통상마찰 해소와 일방적 보호무역조치 역제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있어서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것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므로, 중국과의 FTA 체결을 통하여 중국 시장의 안정적인 확보와 급격한 무역규모의 변화를 방지하는데 기여하고, 역내 각국에서 생산을 하였던 기업들은 무역장벽의 축소로 기존의 생산설비를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추구할 수 있고, 비교우위를 찾아 생산시설의 입지조건에 따라서 산업시설을 재배치할 수도 있다. 생산요소의 재배치 현상은 자본과 기술의 이전효과를 가져오며 역내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증가 시킬 것이다.³⁵⁾

셋째,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적극 대응이다. 지역주의 확산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것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필수적인 일이다. 특히 한국이 제외된 상태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34) 조우훈, 「한·중 FTA의 경제효과와 추진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23.

35) 김봉철,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인텔에듀케이션, 2004

FTA가 확대 되는 경우, 수입국을 한국으로부터 역내국으로 대체하는 무역전환 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한국의 수출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을 활용하기 위한 세계 주요 국가들의 대중국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도 FTA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중국 통상정책을 통하여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³⁶⁾

넷째, FTA를 통한 경제성장의 모색이다. 중국 정부의 국가별 관세 차별화정책도 한국의 대중국 수출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산 기계류에 대해서는 수입 시 관세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 경쟁국인 대만산 기계류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한국의 기계류 수출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기계류에 대한 중국강제인증제도³⁷⁾를 실시하기 어려워 중국시장진출에 애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실정을 고려해 보면 중국의 비관세 장벽이 많은 실정이며, 향후 WTO 합의 이행과 FTA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법령, 세제의 정비 운영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 지역적 보호정책 개선, 제조업에 대해 세계개선 등의 노력이 요구되며, 한·중 간의 FTA는 무역장벽 철폐를 통하여 무역규모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성향상에 따른 동태적인 효과를 통해 GDP와 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FTA 체결로 역내시장에 대한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제도의 투명성이 보장됨에 따라 역내에 생산거점을 확보하여 확대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목적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발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상호의존성 심화에 따른 정치적 외교적 이익이다. FTA의 체결은 경제의 상호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정치적 측면에서도 공동의 이익을 추구

36) 류명명, 「한중FTA 추진에 따른 경제적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 강원대학교 산업대학원, 2009, p.10.

37)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2003년 5월부터 시행하는 품질·안전관련 인증제도다. WTO 가입 전에 중국이 자국산(CCEE)과 수입산(CCIB)으로 나눠 운영하는 것이 자국민 우대라는 지적에 따라 두 제도를 2001년 12월 통합해 1년5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실시하는 것이다. 수출기업이 만일 이 인증을 받지 못하면 통관이 허가되지 않는 것은 물론 때에 따라서는 벌금 480만원(인증 획득 후 인증마크를 부착하지 않았을 때 160만원)을 물어야 한다.

하도록 하여 정치, 안보상의 이익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 중 하나인 중국과의 FTA를 통해 정치적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한·중·일 3국의 FTA가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한·중 FTA를 통하여 동북아의 정치, 안보적 환경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국간 FTA가 매개가 되어 한·중·일 3국간 FTA를 촉진시킬 가능성도 커지고, 한반도의 안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³⁸⁾

3. 한·중 FTA 추진일정 및 내용

한·중 양국의 FTA 논의는 2004년 9월 ‘ASEAN+3 경제장관회의’에서 민간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한·중 양국은 합의에 기초하여 2005년 3월20일부터 2006년 11월까지 2년여 기간 동안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国务院发展研究中心)’가 공동연구를 실시하였다. 양국은 공동연구에서 한·중 간의 무역투자 현황을 비롯한 무역제도와 정책 그리고 무역확대의 장애등을 분석하였을 뿐 아니라 FTA가 양국에 가져다 줄 영향도 분석하였다. 또한 양국은 2006년 11월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개최된 APEC 관료회의 중 한·중 통상장관 회담에서 산·관·학 공동연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2007년 3월부터 2008년 6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산·관·학 공동연구를 실시하였다.³⁹⁾ 그리고 현재는 그 동안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최종 문안을 조율하는 중에 있다.

2010년 10월10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필요성에 대해 3국 정상이 공감을 표시함에 따라 한·중

38) 류명명, 전게서, p.11.

39) 한·중양국은 다섯 차례에 걸친 산·관·학 연구에서 한·중 FTA의 거시 경제적 영향과 산업별 영향 그리고 민감한 산업과 민감한 영역의 처리방식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였다.

FTA를 넘어선 한·중·일 FTA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⁴⁰⁾ 중국기업의 한·중 FTA 인식에 관한 KOTRA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중국기업의 한·중 FTA에 대한 지지율이 93.8%에 달하고 이중 절반 이상(56.7%)의 기업들은 “당장 협상을 시작하자”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국기업들은 동북아시아 FTA 체결 우선순위에 관해, 한·중 FTA 우선(59.0%), 한·중·일 FTA 동시(29.2%), 중·일 FTA 우선(10.1%)순으로 나타내고 있다.⁴¹⁾ 양국은 그동안 많은 나라들과 FTA를 체결했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다. 한국의 경우 칠레와의 FTA 체결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EFTA, ASEAN, EU등과 이미 FTA를 체결하고 발효 중에 있으며, 미국과는 이미 양국이 비준을 마치고 곧 시행에 들어가며, 인도와는 협상이 체결되어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캐나다, 멕시코, CGG, 호주, 뉴질랜드, 페루 등은 협상 중에 있다. 한편 일본과는 FTA를 논의하다 중단되었으나 최근 다시 협상재개를 검토하고 있다.⁴²⁾



40) KOTRA, 「중국기업의 한중 FTA 인식과 전망」, Global Business Report, 2007

41) 김영근, 「동북아 FTA 정책과 남북경제공동체」, 현대경제연구원, 2007, p.6.

42) 한·일 FTA 협상은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5차에 걸쳐 해왔으나 양국의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그러나 2008년 6월과 12월 그리고 2009년 7월 등 세 차례에 걸쳐 협상재개 검토 및 환경조성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제 4 장 한·중 FTA의 기대효과 분석

제 1 절 한·중 FTA의 취약분야

1. 농업

한·중 농업교역은 지리적 인접성, 작목구조 및 소비자선호의 유사성, 그리고 농업 경쟁력에서의 커다란 격차로 특징 지워진다. 부문 내에서 상호 협력적 발전모델을 구축하기가 어렵고, 양국간 FTA를 체결할 경우 다자적 접근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예외적으로 특수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공동보고서에서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에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최대 연 10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우려했다.⁴³⁾ FTA 추진 시 농업부문에서 조건 없는 완전자유화를 실시하는 것은 정치논리상, 또한 부문 내 협력모형을 강조하는 경제논리상 선택 가능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 일부 민감 품목을 인정하면서 농업시장 개방을 FTA 추진의 제약조건으로 인정하고 상호협력적인 협상으로 양국간 경제통합 이익의 극대화를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적합한 접근이다. FTA가 양자 간 협상으로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의견수렴 및 통합과정이 중요하기에 아주 민감한 품목은 자유화 예외품목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한·중 FTA 추진 시 농업부문 자유화의 정도가 WTO 다자간 협상 틀 속에서의 시장개방 정도 이상을 넘어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치 및 경제논리상 어려울 것이다. 다자간 협상 수준으로 농업을 개방하더라도 중국의 경우 예외적으로 특수한 일방적 시장접근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FTA 추진 시 그 이상의 시장개방을 허용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품목별 민감도를 측정하여 차별화함에 따라서 FTA가 양자 간 협상으로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의견수렴 및 통합

43) 네이버뉴스, 「한중FTA, 우리 농업 뿌리째 흔들수도」, 2009

과정이 중요한바 아주 민감한 품목은 자유화 예외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한·중 FTA 체결 시 국내 생산자에 미치는 충격의 정도를 고려하여 농산물의 개방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관세 삭감과 함께 식품 위생기준 검역에 대한 합의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이미 쌀 협상 과정에서 중국은 검역절차의 철폐를 통해 농수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 및 무역역조 해결방안을 거론한 바 있다. 위생검역문제는 국민의 보건에 직결된 사항으로 양자 간 협상창구가 아니라 다자간 규범화의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분야이다. 식품 위생기준 검역 강화를 추진할 수 있는 양국간 협의 창구를 마련하여 국민의 보건위생을 증진, 강화하는 전략적 사고도 요구된다. 또한 고품질화로 소비자의 국내 농산물에 대한 기호를 고급화하여 중국 농산물에 대한 선호관계와 차별화하는 전략이 중장기적으로 요구된다.⁴⁴⁾

한·중 FTA 체결로 농업부문이 조건 없이 개방될 경우 경쟁력, 작목구조의 유사성, 지리적 인접성과 함께 규모의 효과로 우리 농가에 주는 충격이 클 것이다. 따라서 WTO 다자간 협상의 틀 속에서 결정되는 농산물시장 개방 정도에 민감한 한국이 그 이상의 시장개방을 감내하면서 한·중 FTA를 예외조건 없이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인 대안은 농업개방수준을 WTO 다자간 협상 결과의 수준에 둔다는 제약조건하에서 양국 경제통합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FTA 추진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서비스업

서비스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저장이 불가능하고, 특허와 같은 법률적 보호가 어려우며, 상품으로 제시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가격결정 능력이 불분명해진다. 과거에 서비스는 산업특성상 기술수준이 낮고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아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키

44) 이기성, 전게서, p.63.

는 부문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특히 1990년대 들어 상품에 내재되던 서비스 기능이 분리되고 특화된 독립적 전문 업체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이를 공급하면서 생산성이 증대되고 원격지조달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사업서비스, 금융 및 보험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업종을 중심으로 서비스의 중요성이 새로이 인식되었다. 한국 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전체 GDP중에서 2007년 현재 생산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7.6%와 66.7%에 이르고 있다.⁴⁵⁾

다양한 서비스부문 중 특히 디자인, 금융, 통신, 유통 및 운송 서비스 등 생산자서비스와 인프라서비스 등 최신 서비스부문은 그 자체가 최종소비재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조업부문의 기본적인 투입요소가 된다. 따라서 서비스부문이 발전되지 않는다면 한·중 양국이 현재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제조업부문의 지속적인 성장 및 고부가가치화가 불가능할 수 있다.

서비스 수요는 재화와 달리 저장이 불가능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국내에서 최종 소비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대외 환경변화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다. 따라서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 경기 및 고용의 변동성이 완화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서비스업 발전이 경제안전뿐만 아니라 성장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⁴⁶⁾ 일반적으로 무형성 및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 등의 특성을 갖는 서비스 거래는 국내 통상문제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따라서 전적으로 국내 규율을 받아왔다. 서비스가 무역의 대상으로 파악되고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문제가 국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다. 이는 인터넷 등 기술발전과 정부의 규제완화 등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의 국제적 거래 증대는 1950년대 이후 1970년대에 걸쳐 선진국 경제가 서비스 경제로 전환되는 구조조정 혹은 경제의 서비스화와 맥을 같이한다. 경제의 서비스화는 경제 각 부문에서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증대되는 현상

45) 이장규, 「한·중 FTA 대비 중국의 FTA 서비스협정 분석과 정책제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46) 류명명, 전게서, p.99.

에서 찾을 수 있다. 서비스부문이 세계 및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대, 높은 고용창출효과 및 서비스부문의 수출비중 증대를 생각할 수 있다. GDP에서 서비스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소득수준 향상과 더불어 증대되며, 대체로 각국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GDP에서의 서비스 비중은 선진국과 개도국 각각 평균 72%, 49%이며, 이 비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⁴⁷⁾ 서비스부문의 고용 인력은 개도국 전체로는 30% 정도이지만 일부 개도국의 경우 53%에 이르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는 70%에 육박하고 있다.

전 세계 수출에서 서비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로 조사되고 있다. 한·중 양국의 서비스화를 GDP 대비 서비스 점유율, 종사자 및 수출의 비중으로 비교하면, 경제의 서비스화가 가장 앞선 일본의 서비스화를 1로 보았을 때 서비스화는 한국은 0.86이고 중국은 0.51로 평가된다. 중국의 경우 세 부문 모두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⁸⁾

무역특화지수(TSI)⁴⁹⁾ 및 현시비교우위(RCA)⁵⁰⁾지수를 종합하여 부문별로 평가한 결과, 한·중은 상품부문에서 경쟁우위를 갖지만 서비스 부문에서는 경쟁열위를 보였다. 같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한·중 양국의 서비스부문별 상대적 경쟁우위를 성장추세를 감안하여 비교한 결과 중국은 여행과 기타사업 등 2개 서비스부문에서, 한국은 운송 및 기타 사업서비스 등 2개 부문에서 경쟁우위를 보였으나, 중국의 부문별 성장률 추세가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조만간 양국이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중 양국이 개방을 유보하는 부문은 정치·경제적으로 민감한 부문이라고

47) 윤창인, 「한·중·일 FTA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서비스협상의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12.20.

48) 류명명, 전게서, p.96.

49) 한 상품의 총수출액과 총수입액, 그리고 전체 무역액을 이용해 상품의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국제경쟁력 지수로 사용되기도 하며, 0 이상 1 이하이면 그 제품이나 산업이 무역흑자를 기록해 국제경쟁력이 강한 것을 뜻하고 -1에 가까울수록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하거나 수출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0) 세계 전체수출시장에서 특정상품(서비스 포함)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정국의 수출에서 동 상품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사이의 비율로 특정 상품의 비교우위를 판단하는 데 널리 쓰이며 이 지수가 1보다 크면 비교 우위가 있다고 판단한다.

간주할 수가 있다. 한국은 총 12개 분야, 155개 서비스업종 중 10개 분야, 104개 업종을 개방하기로 약속하여 개방규모는 67% 정도로 평가된다. 중국은 10개 분야, 98개 업종에 대해 양허하여 개방수준이 63% 정도에 이르고 있다. 개방을 유보한 부문, 즉 한·중 양국의 민감한 부문은 한국이 7개 부문, 중국 5개 부문이다. 한·중 양국에 민감한 서비스부문은, 사업서비스, 한의학·치의학·수의학 서비스, 조산모·간호사·물리치료사의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중 시청각 서비스 및 보건의료 부문으로 추정된다. 대체로 문화 및 의료 부문이라고 볼 수 있다.⁵¹⁾

외국 서비스공급자의 서비스공급의 제한, 시장접근 불허, 자격요건, 인·허가 등의 국내규제 및 진출국내 사업체 설립 시 지분을 제한하는 등 국내규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3. 중소기업

한·중 양국은 기술력 격차에 따른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자본·기술집약적인 부문에, 중국은 노동집약적인 부문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 체결 시 한국의 경우 자본,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자원 집중이 유도될 것이다. 이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고부가가치화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보다 기술수준은 낮지만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의 FTA 추진은 기술집약적 산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켜 한국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룬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며, 한국의 대 중국 중간재 부품 수출이 촉진돼 한국 기업의 매출 및 수익이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중 FTA에 따른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는 달리 말하면 한국의 저부가가치 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한국이 비교열위를 보이는 의류, 목재가구, 기타 수송 장비, 기타제조품 등에서

51) 류명명, 전게서, p.97.

생산규모가 축소되어 산업의 구조조정은 이들 산업에게 필연적인 일이 된다.⁵²⁾

중국의 관세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섬유류, 신발류, 자동차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FTA를 추진함으로써 관세율을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20대 대중 수출 품목의 평균관세율은 13.1%, 상위 3대 품목(전기·전자기기, 기계류, 플라스틱)의 평균관세율은 약 15%이다. 또한 섬유류에는 15.2%, 신발류와 자동차에는 각각 24%, 25%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었고,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 이외에 13%~17%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⁵³⁾ 양국간 경제협력의 장애요인으로 관세 장벽과 다양한 중국의 비관세장벽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양국간 해결해야 할 주요현안으로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미온적 조치와 할당제도, 수입허가제도 등의 수량규제조치 그리고 각종 기술표준을 통한 여러 가지 형태의 수입규제 등을 들 수 있다.

제 2 절 한·중 FTA 기대효과

1.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가장 큰 동기는 체결국간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다. FTA의 경제적 기대효과는 체결국간 무역장벽인 관세나 수입량 제한 등이 철폐되어 역내 무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태적 효과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역내국에 생산성의 상승이나 자본의 축적 등이 초래되어 간접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동태적 효과로 대별되고 있다.

Viner에 의해서 주장된 정태적 효과는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가 대표

52) 유관영 외, 「한·중·일대비제조업구조분석」, 경제사회연구회소관기관,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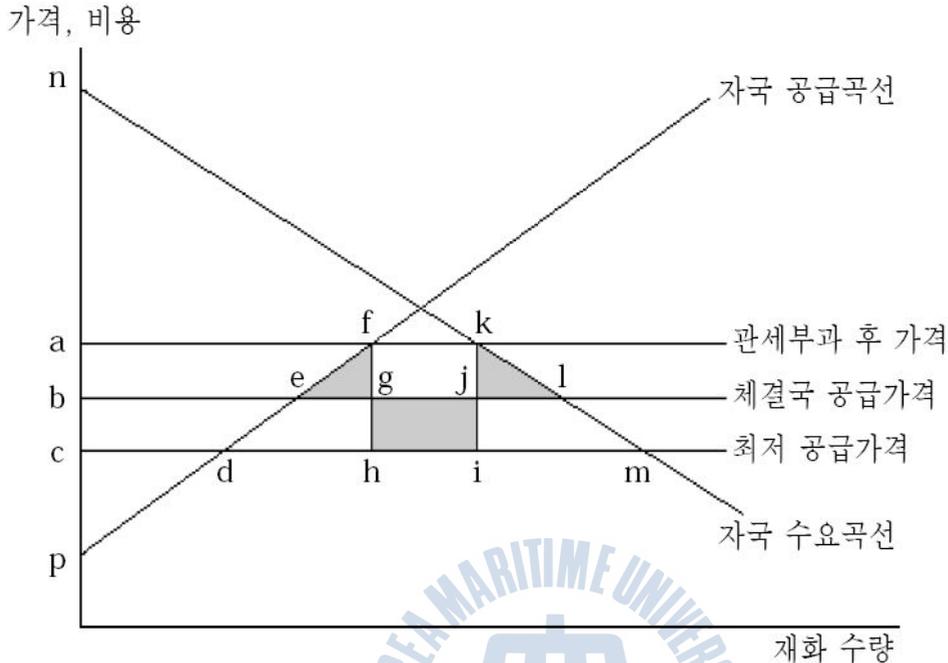
53) 김박수, 「한중일 FTA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민감품목 분석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연구원, 2005

적이며, 이외에 교역조건변화도 포함된다. 우선 무역창출효과는 역내 무역장벽의 철폐에 의해 역내무역이 더욱 확대되는 효과로서, 수입국의 생산자도 수출 확대에 의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교역 당사자들의 경제적 후생이 증대된다.

그리고, 무역전환효과는 FTA에 의한 무역장벽의 철폐가 교역국 내부로 국한되기 때문에, 기존의 낮은 비용으로 생산된 역외국의 재화나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으로 생산되는 역내국의 재화나 서비스가 무역장벽의 철폐로 인해 가격이 낮아짐으로써 대체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이러한 효과를 <그림 4-1>을 통해서 설명하면, 우선 자국은 해외가격에 순응하는 소국이며, FTA를 체결하기 전에는 재화나 서비스를 최저 가격으로 공급하는 국가로부터 수입하고 수입재에 대해서 $t\%$ 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가정하면 이 경우, 자국의 효용수준을 분석하면 소비자가 얻는 잉여는 Δnka , 생산자에게 생기는 잉여는 Δafp 이며, 관세 부과를 통해서 얻는 수입은 $\square fkih$ 가 되어 이들의 합계가 사회적 잉여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FTA가 체결되면, 관세가 철폐되어 수입국이 최저 가격으로 공급하는 국가에서 체결국으로 바뀌었다고 가정하면, 체결국이 공급하는 가격은 원래 자국이 최저 가격으로 수입했던 국가의 공급가격보다 높았으나, 자국과 체결국간에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관세가 부가되는 원래의 수입국이 공급하는 가격보다 낮아지게 되는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자국의 효용수준은 소비자 잉여가 Δnlb , 생산자 잉여는 Δbep 가 되어 사회적 잉여는 이들의 합계가 된다.

따라서, FTA의 체결로 인하여 낮은 가격으로 수입재가 자국 내에 공급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잉여의 증가분은 $\square efkl$ 이며, 이것이 무역창출효과가 된다. 그리고 FTA를 체결하지 않는 역외국에서 체결국으로 수입국이 전환됨에 따라 감소하는 잉여는 관세수입의 손실분 $\square fkih$ 이며, 이것이 무역전환효과가 된다. 여기서 $\square efkl$ 과 $\square fkih$ 를 비교해 보면 $\square efkl - \square fkih = \Delta efg + \Delta jki - \square hgji$ 가 된다. 따라서 $\Delta efg + \Delta jki - \square hgji$ 가 정(+)의 값이면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

<그림 4-1> FTA의 경제적 정태 효과



자료: 신태용 외, 「한중 FTA체결이 한·중 분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산업연구원, 2005

효과에 비해 크기 때문에 FTA의 체결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부(-)의 값이 나타나면 FTA의 체결이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정태적 효과에는 FTA에 의한 공동관세의 설정으로 역내의 구매력이 강화되고, 역외로부터의 수입가격을 내리는 교역조건효과가 있다.

동태적 효과는 FTA의 체결에 의해 역내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직접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체결국들의 경제성장이 가속되는 효과이다. 이러한 동태적인 기대효과는 Ballasa가 처음 주장하고, Baldwin에 의해서 정교화된 것으로 크게 생산성향상효과와 자본축적효과로 구별된다.

생산성향상효과는 시장 확대, 경쟁촉진, 기술 확산, 제도개선 등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로, 시장 확대효과는 역내 간에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이 철폐됨으로써 시장규모가 확대되어 규모의 경제가 실현됨에 따라 생산성이 높

아지는 것을 말하고, 경쟁촉진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재화와 서비스의 유입이 증대되거나 외국기업의 국내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가 늘어나게 됨으로써 국내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되어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기술 확산효과는 해외의 경영자나 기술자 등의 자국 내 유입에 따른 선진 경영 노하우나 기술의 확산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이다. 마지막으로 제도 개선효과는 역내국간 유효한 정책이나 규범 등의 공유 혹은 이전으로 국경조치뿐만 아니라 투자 및 서비스 분야에서도 자유화가 이루어져, 투자를 촉진하는 제도적 개선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효과이다.

자본축적효과란 상기의 동태효과를 통한 생산성 향상효과로 인해 거시 경제적 관점에서 체결국의 기대수익률이 상승하고 경제 전체의 불확실성이 감소되어 국내투자나 대내직접투자의 증가에 따라 자본이 축적되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이 가속되는 효과이다. 즉, FTA의 체결에 의해 시장 확대나 기업 간 경쟁 촉진 등이 초래될 경우 역내국의 경제 환경이 기업 활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됨으로써 역외국 기업의 역내 직접투자가 증가되어 자본축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FTA체결은 <표 4-1>과 같이 무역창출효과와 같은 정(+의) 경제효과와 무역전환효과와 같은 부(-)의 경제효과를 유발하는데, 두 효과의 크기에 의해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 그 범위는 관세에만 국한되지 않고, 기술이나 제도와 같은 광범위한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시점의 정태적 효과뿐만 아니라 시간을 고려한 동태적인 효과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FTA 체결에 의한 경제적 효과의 크기나 파급 경로는 협정을 체결하는 상대국의 시장규모, 경제·기술 수준, 산업구조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관세가 대부분 철폐되고, 투자의욕이 왕성하며, 고도의 경영노하우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외국자본의 유입이나 기술·노하우의 확산 등 동태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다른 한편 시장규모는 크지만 기술수준이 낮아 관세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도국과의 FTA체결에서는

<표 4-1> FTA의 경제적 효과와 영향

효과의 종류		영향의 평가	
		역내의 영향	역외의 영향
정태적 효과	무역창출효과	+	+
	무역전환효과	+(-)	-
	교역조건효과	+	-
동태적 효과	생산성향상효과	+	+
	자본축적효과	+	+

자료: 신태용 외, 「한중 FTA체결이 한·중 분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산업연구원, 2005에서 인용하여 재구성함.

정태적 효과나 혹은 규모의 경제 등을 통한 동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⁵⁴⁾

FTA의 경제적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협정을 체결하는 상대국의 특성이나 협정내용이 자원배분의 효율화나 경쟁촉진, 규모의 경제, 기술 확산, 자본축적이라는 경제성장의 원천을 얻기 위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한·중 FTA의 기대효과

1) 거시 경제적 효과

일반적으로 FTA체결에 따른 효과로서는 단기적으로는 수출입확대에 따른 무역창출효과 및 무역전환효과와 장기적으로는 시장 확대효과, 자본축적효과 및 기술이전효과, 제도개혁효과 등의 효과를 들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CGE모형⁵⁵⁾을 이용하여 한·중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단기 및 <표 4-2>와 같이 중장기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54) 류명명, 전계서, pp.28~32.

55)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이란 관세율 및 기타 비관세 무역장벽을 회원국간에 배타적으로 인하 또는 자유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무역 및 각국 경제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적으로 추정하는 방식.

한·중 FTA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품무역 자유화뿐만 아니라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가 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라 농업 및 제조업, 서비스업까지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 결과,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수출 및 수입은 각각 4.8%, 5.2% 증가하고 중국은 각각 3.5%, 4.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DP 및 후생에 있어서도 중국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지만 양국 모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도, 한국의 수출 및 수입은 각각 5.4%, 5.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무역자유화로 인한 저축과 투자의 증가가 생산의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한·중 FTA의 장기적 효과

(단위 : %)

	GDP	후생	수출	수입	교역조건
한 국	3.132	2.989	5.433	5.858	0.942
중 국	0.584	0.593	3.733	4.944	0.128

자료: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와 주요 이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전국경제인연합회(2007년)가 회원기업 및 상장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중 FTA체결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밝힌 기업이 87.4%에 이르렀고, 국내 경제 전반(70.3%)과 소비자 후생 증대(67.7%), 국내투자 유치(55.4%) 등의 순으로 응답을 하고 있다.⁵⁶⁾

이상과 같이 한·중 FTA 체결이 무역확대의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이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양국간 기업진출이 확대되어 중국의 기술혁신 및 생산성 향상 등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한국에게는 부정적 영향이 올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56) 「한·중 FTA 기업 의견 조사 결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보고서, 2007

2) 산업별 효과

한·중 FTA 체결은 기존의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현재 양국 경제교류에 걸림돌이 되는 비관세장벽, 반덤핑, 원산지규정, 세관통관절차, 지적재산권 등 제반 이슈에 대해 협상을 통하여 일부분 또는 전부분에 걸쳐 수정, 개선이 가능하다.

한·중 FTA 체결은 관세 및 비관세 등 양국간 무역장벽의 철폐로 인한 양국간 무역확대와 한국의 무역수지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제조업에 있어서는 한국은 기술력과 자본에 있어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고, 중국은 노동력에 대해 경쟁우위에 있기에 업종별로는 상이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한국, 일본, 대만 3국의 산업별, 품목별 경쟁력을 비교 분석해보면, 한국의 경우, 석유화학 및 전기전자의 메모리분야, 자동차분야 등에서 일본, 대만보다도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⁵⁷⁾

한·중 간에는 제조업부문에서의 중국의 높은 관세 및 비관세장벽과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 지속으로 인한 통상마찰이 현안으로 대두되어 오고 있으며, 중국은 WTO 가입이후 지속적으로 관세인하를 추진해 오고 있으나 아직도 품목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의 대한국 관세율을 <표 4-3>에서 살펴보면, 중국은 한국에 대해 음식료품 및 담배산업(30.89%)에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자동차(25%)를 비롯한 수송기계(12.29%), 기타 제조업(11.01%)에 많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고무제품, 비금속광물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대중국 관세율을 보면, 농산물(57.5%)를 비롯하여, 축산업, 임업, 수산업 등, 농축수산업 부문의 관세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양국 모두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화가 추진된다면 한국의 경우, 자동차산업 및 전기, 전자, 기계 산업 등에서의 교역확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또한 농축수산업에서의 수출증대가 예상되며 중국의 관세율이 한국에 비해 높기 때문에 한·중

57) 이문형, 「중국의 대한국·일본·대만의 수입구조 비교 분석」, 산업연구원, 2009

<표 4-3> 한·중 관세율 비교

(단위 : %)

구 분	한국	중국	구 분	한국	중국
쌀	5.00	65.00	펄프/종이/인쇄	0.21	5.28
기타농작물	57.51	10.67	화학제품	7.66	6.72
축산업	12.78	12.15	석유/석유제품	5.53	6.30
임업	9.83	9.32	고무제품	8.24	13.70
수산업	13.65	11.04	비금속광물	7.58	12.97
원유및천연가스	3.00	0.00	금속제품	4.26	7.18
기타광물	2.39	2.60	전기/전자/기계	5.59	8.75
식음료/담배	43.64	17.05	수송기계	5.71	12.29
섬유/가죽	9.70	11.83	기타제조업	6.70	11.01
목제품	5.77	4.59			

자료: 최낙균 외, 「한·중·일 3국의 FTA비교 분석과 동북아 역내구간 FTA 추진방안」, 2008

FTA가 체결되면 관세철폐로 인해 단기적으로 대중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⁵⁸⁾

<표 4-4>와 같이 분야별로 보면, 석유화학이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확보로 인한 수출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철강부문에 큰 폭의 수출확대와 공작기계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기계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섬유산업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전자부문에서도 저가의 국산 수입이 급증할 것이며, 자동차 부문에서는 완성차의 수출은 확대될 것이나 저가의 부품수입 역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58) 「한·중 FTA추진에 따른 주요 영향과 대응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 보고서, 2009

<표 4-4>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업종별 효과

업종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자동차	- 국산부품 조달비용 인하로 현지생산차의 원가인하 및 가격 경쟁력 제고	- 완성차 수출증대 효과 제한적 - 글로벌 자동차업체 수출 및 저가 중국산 승용차의 국내시장 진출 우려 - 중국산 A/S부품 수입증가로 국내 중소부품업체들의 구조조정 촉발
전자	- 효과 미미	- ITA(정보기술협정)적용으로 이미 무관세이므로 수출입 증가 요인이 약함 - 중저가 가전 및 범용수입 급증 - 주요부품의 조립공정 후 완제품 역수입 증가 예상
일반기계	- 공작기계를 중심으로 대중수출 증가 기대	- 공구, 금형, 베어링, 건설기계 등은 수입급증 예상
섬유	- 중국관세율 폐지 시 중국시장에서의 대만, 홍콩제품에 가격경쟁력 확보기대	- 중국제품의 국내시장 잠식이 저가 제품에서 중저가제품으로 확대 예상
철강	- 고급제품은 수출확대, 일반제품은 수입확대 예상	- 세계철강경기 하락시 중국 저가 철강재 유입으로 국내철강 산업 피해 우려
석유화학	-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로 수출증가 예상	- 중국의 에틸렌 설비 신증설이 일단락되면 수출증가를 둔화 예상
정밀화학	- 관세율 비교 시 무역수지의 흑자 증가 전망	-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범용제품의 경쟁력이 중국과 비슷해지고, 고부가가치 분야는 선진국이 장악하고 있어 중국 진출이 어려울 전망
중전기	- 효과 미미	- 중국산 일반 범용제품의 국내수입은 대폭 증가 전망

자료: 「한·중 FTA추진에 따른 주요 영향과 대응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 보고서, 2009

3) 외교·안보적 효과

한·중 FTA의 외교·안보적 효과로는 우선 외교통상 협력의 다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즉, 세계경제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경제권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중국과의 FTA 체결은 미국과 일본의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견제하고 패권구조가 아닌 다자방식에 의한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환경조성과 신흥 경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의 기회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⁵⁹⁾ 중국의 적극적인 FTA 추진과 대중화 경제권 형성의 움직임에 비추어 볼 때, 한·중 FTA는 중국을 교두보로 한 중화경제권 지역의 진출과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발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한·중 FTA는 전통적으로 북한과 우호관계에 있는 중국을 통해 북한과의 교류환경을 개선시키고 이로 인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질서를 정착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한국·북한·중국 3자간의 경제적 교류와 협력의 분위기가 높아질 것이며, 한·중 FTA를 통해 3국간 교류와 협력이 증진된다면, 북한의 남한에 대한 신뢰기반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이는 중국입장에서도 바람직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⁶⁰⁾ 동북아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더욱 정당화 시키는 요소가 되는 남한과 북한의 신뢰기반의 붕괴가 발생한다면 한·중은 물론 동북아 경제통합은 그 만큼 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59) 우수근, 「한중 FTA, 중국에게는 ‘정치 전략적 FTA이다」, 미래전략연구원, 2009

60) 김정현, 「한중 자유무역협정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제 5 장 한·중 FTA의 대응전략

제 1 절 예상취약산업에 대한 대책

1. 농업에 대한 대책

한국 농산품의 경우 국제경쟁력은 대부분 공격적 개념의 것이 아니라 방어적 개념의 것이 적용되고 있을 정도로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에 있다. 그리고 한·중 농산물 교역의 특징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수출하고 한국은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구조로, 제조업과 달리 산업 내 무역의 확산을 통한 FTA의 이익 공유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제약 없는 FTA 체결 시 일방적인 농업 수출확대 및 축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으로 첫째, 중국 동북부 지방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농산품의 작목구조 및 소비구조를 가지고 있어 국내 농산물시장에서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제적 이득을 향유할 수 있고 둘째,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한국을 압도하고 있어 일방적인 교역구조가 고착될 가능성이 크며 셋째, 지리적 인접성으로 농산물 신선도 유지에서 타 경쟁국에 비해 절대적인 우위에 있고, 넷째 중국의 경제규모가 우리를 크게 상회하여 규모의 효과를 보이면서 일방성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다.⁶¹⁾

이 네 가지 요인이 서로 상승작용을 통하여 국내 농업시장을 잠식할 경우 우리 농가에 커다란 충격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무역지수 분석에 의하면 농업 내부에서 상호 협력적 발전모델을 구축하는데 한계성이 있다. 따라서 FTA 체결 시 예외적으로 특수한 일방적인 경제적 과급효과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나 농업 특성상 농업인력 및 토지 등 자원이 타 산업으로 이동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가능성은 전혀 없다. 따라서 FTA 체결시 농업개방

61) 김진석, 「농산물국제경제력의 종합적 증대방안」, 한국산업 경제학회-산업경제연구 제12호

에 집착하는 경우 정치적 리스크 및 사회보장 성격의 농민지원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어 결국 FTA 타결자체를 어렵게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은 FTA 논의시 농업부문 개방을 FTA 추진의 제약조건 또는 전제조건으로 인식한 후 FTA를 통한 국민경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탄력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한·중 FTA가 농업분야에 초래할 경제적 결과는 WTO 다자간 협상에서 국제적으로 타결될 시장 개방 폭을 크게 상회하면서 중국에 예외적이고 일방적인 이익을 발생시킬 것이어서 다자주의 국제통상질서 하에서 한국 시장 접근을 추진하는 기타 국가의 이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적극 강조하여 중국의 요구조건을 낮추는 협상전략과 중국과의 FTA 체결로 농업부문을 개방함에 있어 WTO 다자주의 협상에서의 개방정도 이상을 허용할 수 없다는 논리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내적으로는 중국 농업제품과의 경쟁에 대비하여 고품질화로 소비자의 국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를 유지시키는 구조조정 전략 즉, 중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차별화 전략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 할 수 있다.

FTA는 양자 간 무역자유화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정치적 과정의 특성을 갖는바, 국민경제 전체에서의 이익극대화도 중요하지만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 등 부문 내에서의 협력증대와 이에 따른 이익확대가 FTA의 정치적 성공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중 농업부문 교역에서 품목별 상호보완성을 가질 수 있는 가공식품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모델을 창출해야 한다.⁶²⁾

2. 서비스업에 대한 대책

서비스 자유화는 민영화와 경쟁의 도입을 의미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상품

62) 김영미, 「한·중FTA의 바람직한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논문, 2007, p.38.

무역과는 반대로 서비스의 경우 지역협력을 통하여 무역전환을 일으키지 않고 다자협상보다 더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유사한 국가 집단 간에 국내규제 측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상호 인정 및 조화의 형태로 실질적인 협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자문화권, 유교와 불교로 이어지는 종교적 유대 및 인습과 제도 측면에서 타 문화권에 비해 비교적 유사성을 지닌 한·중 간의 지역협력은 범세계적 접근보다 서비스 자유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⁶³⁾

2005년 OECD 각료회의는 ‘서비스 부문 성과 제고’에서 신규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혁신 및 생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서비스시장을 개방하고, 서비스 무역과 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제적인 시장 확대조치를 일방적 혹은 다자적으로 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⁶⁴⁾

서비스부문에 대한 적절한 규제 철폐와 자유화로 경쟁이 강화되면 한·중 양국의 서비스부문이 원활하게 작동되고, 노동과 자본의 효율적인 재분배로 기업들은 투입 재 가격을 낮추고 급변하는 경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게 되어 관련부문의 비교우위 강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이는 나아가 GDP 성장 및 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다양한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경쟁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되어 후생이 증대될 것이다.

현재 한국과 중국은 생산자서비스를 발전시키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상황이며,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는 FTA 등을 통하여 서비스 부문을 개방하는 것이다. 서비스부문의 규제 철폐와 자유화는 한·중 각국이 스스로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WTO의 서비스협상 혹은 한·중 FTA의 서비스부문 개방으로 가속화되고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IMF의 BOP 통계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확인된 한·중 서비스부문의 국제적

63) 류명명, 전게서, p.98.

64) 윤창인, 「한·중·일 FTA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서비스협상의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비교열위 상황이 지속된다면 상품부문의 경쟁우위 및 부가가치 증대는 장기적으로 유지되지 못할 수도 있다. 서비스부문 중 가장 역동적인 부문으로 상품 혹은 제조업 부문과 여타 서비스부문의 투입요소가 되는 금융, 컨설팅, 연구, 광고, 마케팅, 자료처리, 운송, 유통 및 커뮤니케이션 등 생산자서비스 및 인프라서비스의 동반발전 없이는 상품부문의 비교우위를 지탱할 수 없기 때문이다.⁶⁵⁾

생산자서비스는 국내 및 국제적으로 제조업 및 여타 비즈니스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생산자서비스는 첨단제품은 물론 제조업부문에서 세계적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한·중 양국에 매우 중요한 서비스이며, 당연히 한·중 양국 서비스부문 FTA에 1차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대상이다. 한·중 양국은 대체로 건강관련 서비스, 시청각서비스 중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오락 및 문화 서비스 등을 민감한 부문으로 보고 있다. 한국과 중국이 민감하다고 분류하는 서비스부문은 상품부문 경쟁우위 유지 및 서비스부문 경쟁열위 극복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 부문들은 제조업 혹은 국제무역과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약한 부문이기 때문에 한·중 FTA 서비스부문 자유화에서 각국의 시장상황에 따라 유보할 수도 있다. 현재 한국과 중국은 서비스부문 자유화를 통하여 서비스산업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규제 완화 및 독점 제거, 가격 자유화, 인력 양성, 경쟁 촉진 등이 강조되고 있다. 서비스 자유화로 기대되는 이익은 서비스 자유화로 나타나는 해외시장 접근의 개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국내시장개방에 따른 경쟁 및 효율 증대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서비스 자유화의 이익은 해외시장에 대한 수출장벽 제거에서 오는 이익이 아니라 국내외 모든 기업의 서비스시장 참여를 저해하는 장벽을 제거하는 국내개혁과 경쟁체제 도입에 있다.

한·중 FTA를 통한 서비스산업 부문의 개방은 양국의 후생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따라서 담보상태를 보이는 WTO의 서비스협상보다 앞서 더 깊고 범위가 넓은 자유화를 목표로 추진하여야 한다. 비슷한 문화적 배경이라

65) 류명명, 전게서, p.99.

는 지역적 특성을 갖는 한·중은 서비스 무역 자유화를 통한 경쟁의 도입으로 서비스 비용과 가격을 낮추어 서비스부문의 효율 제고를 도모하고 혁신시키는 동시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폭을 넓혀야 한다. 이에 따라 효율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생산자서비스 및 인프라서비스를 중간 투입요소로 활용하는 여타 서비스 및 상품 부문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⁶⁶⁾

한·중 양국은 FTA를 통한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자유화를 추구하여, 한·중 양국의 서비스부문 경쟁력 향상과 상품부문의 경쟁우위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3. 중소 제조업에 대한 대책

한·중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주요 산업은 중국의 강한 가격경쟁력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특히 가격, 경쟁력과 노동력에서 경쟁력을 갖춘 중국의 수입 의존도는 빠르게 증가 되고 있다. 저부가가치 부문의 중국 상품이 국내시장을 잠식해 들어오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부가가치산업이 중국으로 급속히 이동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한국 제조업 전반의 대응방향은 각 산업의 발전단계, 기술 및 경쟁력 수준, 수출입 상황 등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설정이 쉽지는 않다.⁶⁷⁾

한·중 관계에서는 과거 일본이 수출과 직접투자를 통하여 한국 시장에 진출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한국은 지금까지 중국의 부상이 주는 기회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 대부분의 다국적기업이 중국을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지과 시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중국의 산업고도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중국은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제조업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특

66) 류명명, 전게서, p.100.

67) 한국무역협회, 「대중국 중장기 교역 전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연구보고서, 2004

히 섬유산업의 의류부문은 국제경쟁력 약화로 노후설비 폐기, 해외이전, 지속적인 구조조정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컴퓨터는 조립공정이 대부분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으로 이전되고 주로 관련부품의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백색가전을 비롯한 일부 전자제품과 철강제품 등에서도 중국의 약진으로 한국 산업은 세계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중국 산업고도화의 속도로 볼 때 이러한 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 협상이 개시된다면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는 방향에 협상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실제 협상 시에는 민감 품목을 더욱 세분화하여 하부단위에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철폐 또는 인하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하여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품목은 원활한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원천기술 및 핵심기술의 확보를 위한 국내외 기업과의 기술 제휴 및 R&D 투자의 확대, 제품의 고부가 가치화 및 차별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 신제품, 신공정 및 새로운 디자인 등의 개발에 의한 시장 선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의 강화를 통한 소재 및 부품의 기술수준 제고, 전문 기술 인력의 양성, 지속적이고 원활한 구조조정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이 제조업 전반의 대응방향이 될 것이다.⁶⁸⁾

차후에 한·중 FTA가 체결되면 양국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철폐 또는 완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양국의 시장통합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중국을 기반으로 하여 경쟁력이 강화된 다국적 기업의 제품과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므로 한국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제 2 절 주요쟁점에 대한 대응 전략

1. 중국 측 전략예상과 대응

68) 류명명, 전게서, p.87.

중국이 FTA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원부족 문제의 해소, 기업의 생산 및 경영효율성 제고, ‘큰 이웃 외교’ 효과의 추구 등이다. WTO와 같은 다자간 무역협력은 회원국이 많아 협상비용이 높고, 리스크 예방체제 미비로 글로벌경제 환경이 급변할 때 개별국가의 위기대응이 취약하게 된다. 이 때문에 FTA를 통한 시장규모 확대는 회원국 기업에게 합리적인 자원배분, 규모의 경제, 산업구조 조정, 비교우위 확보 등의 장점을 제공하게 된다. 기업은 생산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역내 협력을 통한 자원, 에너지 수입의 채널을 확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안정적으로 신뢰성 있는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자원 부족난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지역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와 외교 측면에서 ‘큰 이웃 외교’ 에도 유리하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및 일본의 영향력에 대해 균형을 잡고자하는 국제정치 동기도 작용하고 있다.⁶⁹⁾ 따라서 FTA를 통한 대외 무역 강화는 향후 수년간 중국의 주요 전략이 될 것이다. 전략적 자원, 에너지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중국은 국제시장의 효과적인 공급을 받지 못할 경우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제약받기 때문에 대외 투자를 통한 해외 자원기지를 확보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또는 무역 마찰과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 지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일부 기업은 생산기지의 다각화를 추진하며 범세계적인 생산최적화에 의존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글로벌 다국적 기업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부분 중국기업은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등 상대적으로 후진 지역을 대외 투자 지역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대외 투자를 통한 경쟁력 유지로 내수 부진, 무역 마찰의 심화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는 중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주요시장인 미국 등의 수입수요가 정체하면서 중국의 수출확대 촉진을 위해 ‘FTA 전략’ 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FT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해 수출을 대폭적으로 늘릴 수 있었다. 예컨대 파키스탄의 경우 2009년 1~4월 기간에 세계 수

69) 이장규, 「중국의 FTA 추진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입은 11.5%가 감소했지만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31.5%가 증가했다. 뉴질랜드의 경우도 전체 수입은 8% 감소했지만 대(對)중국 수입은 11%가 증가했고 칠레의 경우도 총수입은 33% 감소했으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9%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와 같이 중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 대한 수출 신장률이 높고 이들 국가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높다. 중국은 이와 같이 FTA가 안정적인 해외수요 및 수출 확대 측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이 FTA를 체결했거나 협상을 하고 있는 국가들을 통해 보면 중국의 FTA 정책은 협력대상국가 및 협력 방식에서 전략적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적으로 보면 FTA 경험이 있는 국가들은 국내의 압력 해소, 비교우위의 상호보완, 정치·경제적 이익의 추구 등을 위해 FTA 대상국을 선정하고 완벽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은 주로 이웃국가 또는 자원이 풍부한 국가와 FTA를 추진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적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대응, 동북아에서 경쟁적 지역주의 지양, 지역안보환경의 개선, 정치적 긴장관계의 완화 등 정치안보적 목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경제적 편익, 무역블록화가 아닌 세계무역 자유화의 수단, 국내 취약산업의 성장 등과 같은 경제적 이득을 FTA의 추진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⁷⁰⁾ 중국이 비교적 일찍 가입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⁷¹⁾는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주창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무역협정이란 보다 자주적이고 평등한 자격으로 참여한 제도화한 정부 주도의 경제협력포럼이다. 중국이 참여하는 방콕협정과 아세안+1(10+1)등 협력방식에서 국가별 경제력과 정치의 영향력은 한계가 있으며,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조직한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⁷²⁾도 당초 정치적 목적으로 시

70) 구기보·홍정륜, 「중국의 한중 자유무역협정 추진전략과 정책적 기준점」, 한국무역상무학회지, 2007

71)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6개국이 환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과 무역증진을 목적으로 결성한 기구. 1989년 11월에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에서 제1차 회의가 열렸으며 1991년에 제3차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72) 상하이기구라고도 한다. 1996년 4월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키

작되어 아직 실질적인 지역경제 통합체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기타 체결 또는 발효되기 실시한 FTA는 아직 시작단계에 머무른 상태이다. 따라서 중국의 FTA는 주변국가와의 외교에 기반을 두는 단일대상자와의 협력이 대부분이며 총체성과 장기성이 부족하다. 또한 중국이 체결한 FTA 대상국들은 아세안을 제외하면 대부분 경제규모가 작아 양자 간 무역액이 중국 총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협정 체결에 따른 수혜는 한계적이다.

실천적인 측면에서도 협력 효과 및 협력 추진과정에는 많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 중국의 산업은 노동집약형과 자원집약형 제품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체결하거나 협상 중인 지역무역협력체는 대부분 개발도상국과 추진한 것이다. 이 때문에 FTA로 인한 효과는 초기에 이미 다 드러나게 되어 지역통합의 실질효과는 한계가 있다. 즉 산업구조가 비슷하고 협력국가의 경제성장 수준이 낮아 전체적인 편익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국의 FTA 정책에는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일본이나 미국 등의 다른 선진국보다 한국과 FTA를 체결하였을 경우, 기술격차 해소를 통한 산업경쟁력강화 가능성 및 상대적으로 적은 제도개혁, 구조조정비용 및 양국간 경제관계의 상대적 용이성 등의 면에서 한국과의 FTA가 다른 국가들보다 더 유리하다.⁷³⁾

또한 FTA 협상의 복잡성 때문에 지역 협력은 추진과정에 다양한 걸림돌에 부딪히고 있다. 지역경제 통합 이론에 따르면 FTA의 경제성장 촉진 효과는 FTA의 개방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상당부분 좌우되지만 회원국이 많을수록 FTA의 수준을 올리기가 어렵다. 중국의 대외경제 관계에서 위상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이웃 주변 국가들은 중국의 ‘이웃 외교 전략’에 힘입어 중국의 지역무역협정 전략의 중요한 대상국으로 부상했다. 이에 비해 아세안지역은 범위가 크고 국가별 경제적 발전 단계에 큰 차이가 있고, 정치적 제도 및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다르며 민족도 다르다. 동시에 아세안은 서구의 경제·정치적 요인의 영향

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 국경지역의 안정을 위해 ‘군사 부문 신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상하이 5개국’ 회의를 모태로 한다. 2000년에 우즈베키스탄이 합류한 뒤, 2001년 6월 15일 상하이에서 ‘상하이협력기구’로 정식 출범했다.

73) 최원기, 「중국의 FTA 정책과 한·중 FTA 전망」, 미래전략연구원, 2006

을 받기 때문에 중국과의 지역협력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중국정부는 한·중 FTA 체결을 통해 양국간의 무역협력 수준의 제고와 역내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한·중 중심의 경제협력체로 쏠리도록 하는 ‘FTA 도미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⁷⁴⁾ 중국은 수출에서 구미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체질을 전환하길 희망하고 있다. 한·중·일의 총 GNP는 19조 달러로 유럽의 12조 달러에 육박하지만 3국간 무역규모와 투자액은 각각 3개국 총무역과 총 투자액의 17.6%와 6%에 불과하다. 이는 다시 말하면 한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과 투자의 잠재력이 크며 이는 자유무역지대의 설립이 양국간 경제무역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임을 보여준다.⁷⁵⁾ 한·중 양국간 무역은 중간재가 중심이 되어 있는데 중간재는 이미 아주 낮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에 양국간 소비가 촉진되지 못할 경우 한·중 FTA가 무역을 창출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2. 협상쟁점별 구체적 대응

한·중 FTA에 대해서 국내기업은 전반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한·중 FTA가 체결되면 수출환경이 개선되어 수출확대 및 한국제품의 중국시장 점유율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한 신규 사업의 투자확대 등 국내기업의 진출이 한층 활발해 질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기업의 중국진출 및 투자에 대한 방향 및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수출증대 및 성공적인 현지진출을 위해서는 중국내 국내기업의 통상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국은 한·중 FTA 협상을 상품교역 중심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겠지만 한국은 한국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단순 상품교역 차원이 아닌 투자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포함한 수준 높은 FTA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글로벌 스탠더드 정착,

74) 썬 자, 「중국의 FTA 추진배경과 전략 해부」, LG주간경제, LG경제연구원, 2007

75) 박변순 외 「한·중 FTA 의의와 주요 쟁점」(연구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

비관세 장벽 철폐 및 정책 투명화 등을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⁷⁶⁾

한·중 FTA가 양국에 win-win하기 위해서는 협상 추진시, 상호관심분야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부문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비관세장벽의 해소는 성공적인 FTA 체결의 핵심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예방책과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무역협회(2007)의 조사에 의하면, 중국은 중국강제인증(CCC)제도, 전자제품오염통제관리제도, 자국부품 사용 장려 및 통관지연 등의 인위적인 규제로 국내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중국진출에 큰 제약요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⁷⁷⁾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FTA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할 것이다.

첫째, 포괄적 수준의 한·중 FTA 체결이다. 한·중 FTA 체결은 한국에 있어 수출확대 및 한국제품의 중국시장 점유율 상승의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한 신규 사업의 투자확대 등 국내기업의 진출이 한층 활발해 질 것이다. 다만, 최근 중국의 외국인투자, 무역 등에 관한 각종 정책 강화로 중국내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정부의 중국에 대한 통상환경의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FTA추진에 있어 상품분야 협상을 먼저 체결하고 서비스분야 협상을 나중에 체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포괄적인 FTA를 체결할 경우 협상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것에 대한 우려와 관세 이외의 분야에서는 개방에 민감한 자국 산업의 보호와 고품질 저가격의 상품과 서비스 구입 기회확대와 같은 소비자 측면의 이득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⁷⁸⁾

한·중 간 교역 특성을 감안할 경우 한·중 간 FTA로 상호 관세인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공산품 분야에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증대시키는 효과는

76) 김종성 「중국진출기업을 위한 한·중 FTA협상 및 향후전략」 부산대학교 동북아시아역학신대학원, 2008년

77) KOTRA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16개 주요수출국을 대상으로 ‘주요국의 비관세장벽(NTBs)현황분석을 한 결과 총261건의 비관세장벽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중 중국이 35건으로 가장 많은 장벽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OTRA 「주요국의 비관세장벽(NTBs)현황분석」 2007

78) LG경제연구원, 「중국의 FTA 추진배경과 전략해부」, 2007

기존의 한·중 관련 연구들에서 나타난 바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반면 중국산 제품 또는 중국 내 제3국계 외자 기업의 한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은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중 FTA에 따른 대중국 수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세 철폐와 더불어 비관세조치의 완화, 지적재산권 보호, 중국 내 투자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서비스시장 개방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포괄적 FTA가 협상의 타결 가능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한국의 농업시장 개방 민감 품목의 선정 등 이해관계의 조정이 쉽지 않은 이슈들이 등장할 것이다. 협상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이슈간의 교환(trade-off)이 가능해질 것이며 따라서 협상타결의 여지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한·중 FTA 추진 동기는 순수한 경제적 동기보다는 자국 중심의 지역주의 형성을 촉진하려는 외교 안보적 동기가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경제통합 주도권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은 한·일 FTA에 앞선 한·중 FTA의 체결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한국은 대중국 수출증대 등 한·중 FTA 추진에서 경제적 동기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국간 교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FTA를 통한 대중국 수출증대 효과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현재 한·미, 한·EU FTA 타결 등 동아시아 내의 경제통합 흐름에서 우리한 위치를 선점해가고 있는 상황으로 일본과 중국과의 협상을 동시 다발적으로 이끌어가면서 협상에서의 경제적 실익을 최대화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관세인하 문제이다. 한·중 FTA를 통해 공산품의 관세인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중 간의 FTA 교역 특성을 감안한 관세인하 협상전략이 필요하다. 한·중 간 FTA를 통해 무관세화 FTA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대 효과는 직접적인 가격인하 효과와 전환효과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가격효과는 관세인하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직접 영향을 받는 효과이고 전환효과는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만 관세인하를 추진할 경우 중국 수입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의 제품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대체하는 효과로 인

해 발생하는 수출증대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공산품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인하 요구전략으로, ① 중국의 대한국 명목관세율인하와 실질 관세율 인하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관세인하 협상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FTA에 따른 가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명목관세율이 높은 품목보다는 중국의 대한국 실질수입관세율이 높은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세인하를 추진해야 한다. 중국의 대한국 실질 관세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품목은 완성차, 의류, 가전기기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한국이 중국에 비해 관세율이 높고 동시에 양국간의 관세율 격차가 큰 품목의 경우 FTA에 따른 수입증대 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② 한·중 FTA에 따른 중국의 관세인하로 전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국 수입시장에서 경쟁국과 치열한 경쟁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의 대세계 가중 평균 관세율이 높은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세인하를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이 품목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국 측의 시장보호 요구가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협상전략이 요구되며, ③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에 의한 대중국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기업이 한국으로부터 조달하는 비중이 큰 중간재에 대한 관세인하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중간재의 관세인하에서 가공무역을 위해 수출되는 중간재보다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목표로 수출되는 업종의 중간재에 대한 관세인하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업종에는 자동차부품과 석유화학 업종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④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국의 내수시장을 목표로 수출되고 있는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무역방식 분류에 따르면 중국의 수입 중에서 일반 무역 비중이 높은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제품의 성격에서는 소비재에 해당하는 품목이며, ⑤ 그동안 중국의 고관세로 인해 중국에 대한 수출이 부진했던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대체로 내구소비재류가 이러한 제품군에 속하며 중국이 가장 시장을 보호하고자 하는 품목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품목의 경우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관세장벽을 피해 이미 현지에서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있어 관세인하에 따른 추가적인 혜택은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지 않은 일부 제품군을 중심으로 나타나게 된다.⁷⁹⁾

셋째, 원산지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한·중 FTA 추진으로 공산품분야의 관세장벽이 없어질 경우, 옴가의 중국기업의 제품 및 다수의 제품들이 한·중 FTA 체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제3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을 막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확대는 중국 내 한국계 기업 중국 로컬기업 중국 내 제3국계 외자기업 등으로부터 전 방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한·중 FTA 추진으로 공산품분야의 무관세화가 이루어질 경우 중국기업이 생산한 제품 뿐 아니라 중국 내 제3국계 외자기업 제품의 대한국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면에서 한·중 FTA 이후 가격경쟁력을 갖춘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국내의 노동집약적 중소기업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농산물 이외에 제조업 분야에서도 우리의 민감 품목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한·중 FTA 원산지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제3국 제품의 중국 내 제3국계 외자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제품의 경우 핵심부품과 소재를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국 내 제3국계 외자기업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적재산권의 보호 문제이다.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한·중 FTA 체결에 있어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사항이다. 전 세계적으로 FTA가 확대됨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문제는 일국의 전략적 자산이자 상품으로 인식되어야 할 중대한 자원이다.⁸⁰⁾

중국은 현재 컴퓨터 소프트웨어, 음반 등의 불법복제가 만연되어 있으며, 특히, 유사상품의 유통으로 우리 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한·중 FTA 체결 시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해야 할 것이며, 상표법 등에 대한 가

79) 전호국, 「한·중 FTA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80) 전호국, 상계서, p.43.

입을 유도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표 5-1 > 연도별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례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8
건수	11	8	6	6	8	13	21	8

자료: 특허청

물론, 최근 중국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법률이 강화되고 있으나, 다만 이와 관련하여 2007년 중국의 WTO 이행보고서를 보면, 중국정부의 지적재산권 집행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서 지적재산권 위반자에 대한 매우 낮은 벌금수준, 형사 처분의 기소표준이 매우 높아 실제로 형사 처벌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향후 한국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며,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지역특허청 설립 등 진일보한 지적재산권 공동 인정 및 보호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적극적인 의제설정이 필요하다.⁸¹⁾

3. 한·중 FTA의 대응과제

1) 민감 분야의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방안

중국과의 FTA 추진에는 농업과 노동집약적 제조업 등 민감 산업 부문의 피해 및 반발이 예상되며 이에 대해 한·중 FTA가 각 산업별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연구검토하고 한국의 전반적인 FTA정책의 틀 속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중 FTA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물에 대해 품목별 관세자유화를 차별적으로 진행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중국에 한국 농업의 여건과 쌀이 가지는 국내정서 등을 강조하여 유연한 협상태도를 끌어낼

81) 손 빈, 「한·중 제조업 부문의 교역현황과 FTA 체결 시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수 있는 논리 개발도 필요하다. 제조업에 있어는 구조조정에 수반되는 실업의 증가와 중소기업의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FTA 체결에 따른 대중국투자가속화가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산·관·학 공동연구의 조기 출범

양국 모두에게 있어 한·중 FTA 협상의 본격적 추진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갖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간의 합의에 따른 양국 산·관·학 공동연구 단계에 조속히 진입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정부간의 합의 이전에도 양국의 연구기관들이 공동연구를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향후 공식적인 정부간 공동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연구는 특히 양국간에 가로놓인 FTA 수립의 장애요인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러한 장애요인들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상호간에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많은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의 입장을 상호간에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양국이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 하다. 특히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 업계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의 채널을 만들어 가동함으로써 협상의 의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3) 다양한 협력의제의 발굴

FTA는 양자 간 무역자유화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정치적 과정의 특성을 갖는바, 국민경제 전체에서의 이익 극대화도 중요하지만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 등 부문 내에서의 협력증대와 이에 따른 이익확대가 FTA의 정치적 성공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업이나 제조업 부문에서 양국간 협력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면 FTA 체결에 추진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관세율 인하와 무역원활화 등 교역 활성화 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협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수준 높은 FTA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의제를 발굴해야한다. 또 투자, 기술협력, 정책협조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의제를 포함시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양

국 모두 FTA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한 협상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4)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노력

양국간 교역과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한국 경제의 대중 의존도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다양한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주는 충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경제가 과열된 것 같은 우려에서 오는 불안감, 환율변화를 포함한 중국의 금융건전성에 대한 우려, 양국 무역마찰 증가에 대한 우려, 국제원자재 가격의 불안, 철강, 조선, 자동차 등 동북아 지역 주요 산업의 생산과잉 우려 등이 동아시아 지역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중국경제의 부상으로 인한 불안정 이슈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틀을 정부와 민간 각 부문에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아시아통화기금(AMF)이나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등을 통한 역내 위기관리 시스템의 구축, DDA 등 다자간통상협력에서의 정책 공조, 반덤핑 등 무역규제제도의 투명화 등도 중요한 정책협력의 영역이다. 또한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역내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분야에서의 투자협약체 구성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역내에서 과잉중복투자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면, FTA에 따르는 양국 산업계의 우려를 상당부분 완화할 수 있다.

5) 비경제분야 교류 활성화

한·중 FTA가 동아시아 공동번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장이라는 인식이 양국 국민사이에 확산되고, 인근국가들에게까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동북아 각국에서 점증하고 있는 민족주의적 경향이 한·중 양국 국민의 상호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FTA 체결에는 양국 모두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국민의 우호적인 정서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양국의 고대사의 해석 문제를 둘러싸고 형성된 양국민간의 오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양국민 사이의 우호적인 정서가 훼손될 경우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민간차원의 문화적 교류 확대로 상호이해 증진, 양국간 관광교류의 지속적 증

진을 위한 노력 강화, 동북아 경제공동체 개념 공유를 위한 시민적 노력 확대 등이 필요하다.

6) FTA에 대한 기업 및 국민적 차원의 공감대 형성

한·중 FTA에 대한 관심을 기업 차원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은 개방적인 세계경제 없이는 이룩될 수 없는 것이었으며, 한국과 중국의 기업들은 개방화된 세계시장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려왔다. 따라서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양국의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FTA에 대한 상호 이해를 넓히고 협력을 강화한다면 한·중 FTA 형성을 앞당기는 강력한 촉진제가 될 것이다. 또한 양국 정부는 개방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중 FTA야 말로 win-win을 통한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FTA를 성사시킴으로써 동아시아 공동번영의 틀을 구축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여야 한다.⁸²⁾

한국은 칠레와의 FTA발효 2년에 거대한 성과를 취득했다. 그러나 경제적인 소득보다 훨씬 더 큰 소득은 한국이 적극적인 개방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한국이 한·칠레 FTA를 통하여 개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벗고 향후 보다 능동적으로 거대경제권과 FTA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값진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험은 나중에 한·중 FTA의 추진에 대해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정부는 농업과 피해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국의 광범위한 사례 조사와 함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정부 내에 FTA 부서의 권한 강화와 기구 확대 및 전문 인력의 보강 등도 절실하게 해야 된다. 또 한편에 민간차원으로써 농민, 시민단체를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과 국민에 대한 홍보기능을 강화하여 설득과 공감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중 양국은 역사문제 때문에 수십 년간 우호교류를 거의 끊는 상태로 되었다. 하지만 한·중 양국은 문화상에 공통성이 존재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며

82) 엄학의, 「한·중FTA의 경제적 효과와 추진과제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2006, p.81.

역사상에 수천 년의 우호교류 역사가 존재했다. 따라서 한·중 양국간에 문화상의 동질성 때문에 문화적인 교류를 많이 촉진해서 양 국민 간의 이해와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제 6 장 결론

한·중 FTA는 현 상황 즉, 세계화와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지금 불가피한 선택이다. 국가 간 FTA 체결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FTA를 통해 교역 및 투자를 활성화 시켜 자국의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자는 뜻으로 볼 수 있다.

한·중 양국은 아시아 경제협력에서 중요한 나라로서 양국간 FTA를 아시아 지역경제협력을 추진하여 한·중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무역관계는 수교 이후 급속도로 성장해 왔고, 중국은 이제 한국의 명실상부한 제1의 교역대상국이 되었으며, 경제 관계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경제부분에서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고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 역시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한·중 무역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통상마찰이 빈발하는 등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경제의 고도성장과 한·중 간 경제교류 확대를 통한 한국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세계경제 발전추세 및 선진국의 통상정책 기조를 감안할 때에 양자간 혹은 다자간 FTA 체결은 더욱 확산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소외되는 역외 국가의 경제적 손실은 점차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무역환경, 한·중 교역 및 투자관계의 특수성, 무엇보다도 세계 경제대국으로 급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과 동아시아 대부분의 지역이 FTA 체제로 들어가고 있는 경제 산업구조의 변화와 한국 기업들의 대 중국 해외직접투자 현상 등을 감안할 때 한·중 FTA는 양국간의 필연적인 조치라 하겠다.

우리 경제계는 한·중 FTA를 기정사실화하고 경제실익을 확보하면서 취약산업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높은 교역장벽과 성장잠재력을 봤을 때 한·중 FTA를 가장 시급한 협정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기업들이 중국과의 FTA체결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이들 일부 기업들은 손실이 불가피 하므로 정부는 취약산업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국내외 정황으로 볼 때 중국과의 FTA 체결은 불가피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우리보다 중국이 한·중 FTA 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지금, 중국의 전략을 충분히 숙지하고 우리의 취약분야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대책을 세우고, 현재가 아닌 미래를 기준으로 삼아서 중국 경제와 산업 경쟁력의 급성장 추세를 감안하여 현재의 경제 산업구조가 아닌 10년 후, 20년 후에 벌어질 구도를 미리 그려보고 우리의 협상전략을 짜야 한다.

본 논문은 한·중 FTA 체결 후 한국의 각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각종 문헌들을 참고하여 한·중 FTA가 초래할 수 있는 대내외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한·중 FTA가 타결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요원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양국의 이해속도에 따라서 타결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나타난 한·중 양측의 쟁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한·중 FTA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장이수 외, 「신국제통상론」, 서울: 박영사, 2007
- 고수영,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 고준성, 「자유무역협정의 법적고찰」, 법무부, 2003
- 구기보·홍정륜, 「중국의 한중 자유무역협정 추진전략과 정책적 기준점」,
한국무역상무학회지, 2007
- 김박수, 「한중일 FTA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민감품목 분석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연구원, 2005
- 김봉철,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인텔에듀케이션, 2004
- 김세영·신상식, 「FTA확산과 한국의 대응」, 두남출판사, 2003
- 김영근, 「동북아 FTA 정책과 남북경제공동체」, 현대경제연구원
- 김영미, 「한·중 FTA의 바람직한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김종성, 「중국진출기업을 위한 한·중 FTA협상 및 향후전략」
부산대학교 동북아지역혁신대학원, 2008
- 김정현, 「한·중 자유무역협정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진명, 「중국의 FTA정책과 한·중FTA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김진석, 「농산물국제경제력의 종합적 증대방안」,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제12호
- 김현진 외,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
- 류명명, 「한중FTA 추진에 따른 경제적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
강원대학교 산업대학원, 2009

- 박번순 외 「한·중 FTA 의의와 주요 쟁점」(연구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
- 박성호·림금숙, 「한중통상정책비교론」, 대명출판사, 2007
- 손 빈, 「한·중 제조업부문의 교역현황과 FTA체결시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손찬현, 「한·일 FTA의 경제효과와 정책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 시 빙, 「한·중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농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신경환·박종수, 「국제통상의 이해」, 두남출판사, 1999
- 신태용 외, 「한중 FTA체결이 한·중 분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산업연구원, 2005
- 썬 자, 「중국의 FTA 추진배경과 전략 해부」, LG주간경제,
LG경제연구원, 2007
- 안병민,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와 추진과제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양평섭 외, 「한중 교역특성과 한·중FTA에 대한 시사점」, 연구보고서 07-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우수근, 「한중 FTA, 중국에게는 ‘정치 전략적 FTA이다」, 미래전략연구원,
2009
- 위영개, 「중한FTA의 경제적 효과와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1
- 유관영 외, 「한·중·일대비제조업구조분석」, 경제사회연구회소관기관, 2003
- 윤창인, 「한·중·일 FTA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서비스협상의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 염학의, 「한·중FTA의 경제적 효과와 추진과제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2006
- 이기성, 「한중 FTA 추진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대학원, 2010
- 이문형, 「중국의 대한민국·일본·대만의 수입구조 비교 분석」, 산업연구원,

2009

- 이장규, 「중국의 FTA 추진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 이장규, 「한·중 FTA 대비 중국의 FTA 서비스협정 분석과 정책제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 전호국, 「한·중 FTA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논문, 2011
- 정인교, 「우리나라의 FTA 정책 평가 및 정책 시사점」, 한국무역학회, 2008
- 정인교·노재봉,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KEIP, 2009
- 정재호, 「자유무역협정하의 최적 관세 및 관세 유예기간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1
- 조우권, 「한·중 FTA의 경제효과와 추진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지만수,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의 몇 가지 논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 최낙균 외, 「한·중·일 3국의 FTA비교 분석과 동북아 역내구간 FTA 추진방안」, 2008
- 최원기, 「중국의 FTA 정책과 한·중 FTA 전망」, 미래전략연구원, 2006
- 홍정옥, 「한국의 한중FTA 추진전략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전국경제인연합회, 「한·중 FTA추진에 따른 주요 영향과 대응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 연구보고서, 2009
- 한국무역협회, 「대중국 중장기 교역 전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연구보고서, 2004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한국의 대 중국 품목별 교역 동향」, 2007
- KOTRA, 「중국기업의 한중 FTA 인식과 전망」, Global Business Report, 2007
- LG경제연구원, 「중국의 FTA 추진배경과 전략해부」, 2007

네이버뉴스, 「한·중 FTA, 우리 농업 뿌리째 흔들수도」, 2009
네이버백과사전 100.naver.com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www.fta.go.kr
중국상무부 www.mofcom.gov.cn
KOTRA 베이징무역관 (2008) www.kotra.or.kr
특허청 www.kipo.go.kr
한국무역협회(KITA) www.kita.net

